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734-01

#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 보고서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 선 영

## 연 구 진

책임연구원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공동연구원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홍사웅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장)
공동연구원	해민영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사평가팀장)
연구원	배윤영 (변호사)
보조원	송안나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센터 연구원)



## 목 차



I.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	7
II. 예술의 산업화 법제의 필요성 .....	11
III.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	19
1. 예술산업의 구성요소 .....	19
2. 예술산업에 관한 독자 진흥 법률 제정의 필요성 .....	24
3. 법체계의 구성 .....	34
IV.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문 해설 .....	74
제1장 총칙 .....	47
1. 목적 .....	47
2. 정의 .....	5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69
4.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	72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9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	81
6. 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	81
7. 전문인력의 양성 .....	84
8.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 .....	87
9.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	91
10. 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	95
11. 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	99
1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103
13. 지식재산권기반 정책 .....	106
14.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	108
15.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	111

16. 실태조사 .....	115
17.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	119
18.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	126
19.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	129

###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 Ⅲ

20.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	135
21.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	140
22.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	145
23. 예술소비자 보호시책 .....	154
24. 청약철회 .....	157
25. 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	164
26. 예술소비자보호지침 .....	167
27. 분쟁조정 .....	171

### 제4장 보칙 ..... 178

28. 수수료 .....	178
29. 권한의 위임·위탁 .....	181
30. 과태료 .....	184

### 부 칙 ..... 189

31. 시행일 .....	189
32.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	191

## V.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Ⅳ

1.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94
2.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안) .....	203
3.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208

## VI. 부록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24

## I.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

## 1. 연구목적 및 배경

- **(현황 및 문제점)** 예술분야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예술의 대중화로 뮤지컬, 미술품 등에서 예술시장이 형성되는 추세임
  - 그 동안 예술분야는 자발적인 수요보다 공공부문의 공급이 예술창작을 견인해온 상황으로, 2014년 기준 공연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2.6%, 예술단체의 자체수입 비중도 45.4%로 공공지원금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기준)
  - 공연시설 수나 종사자수, 단체 수 등 양적 지표는 성장하는 추세이나, 불황-메르스 등 대내외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른 수익 흐름도 불안정해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임
  - 반면, 뮤지컬이나 미술품 등 일부 대중화된 영역에서는 예술을 소비하는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아트상품 등 원작을 활용한 부가시장에 대한 수요 역시 형성되는 중임
- **(예술산업 진흥방향)** 시장성 있는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개발이나 관객개발에 대한 투자적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예술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재형성됨
  - 201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예술산업의 가능성을 재모색하였으며, 예술의 산업화는 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시장규모의 확장을 통해서 예술관련 영역을 확장시키고, 예술산업의 구조는 세분화되고 모듈화되어야 함을 제시
- **(예술산업 진흥 위한 법·제도 필요성)**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 목적 및 도구 재정비 필요성 역시 제고되면서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가 진행된바 있음
  - 동 연구에서 예술진흥정책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뉘며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예술의 산업화 측면에서 예술산업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문화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로 타 문화산업분야도 법·제도적 정비를 계기로 산업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언급
- **(예술산업 법제화를 통한 진흥 목표)** 예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으로 예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창작 지원 중심에서 기획-제작-유통 등의 분업화, 전문화를 통한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2. 연구범위

### 가.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문헌자료 검토

- 국내 산업진흥법 사례 검토 및 분석
- 해외 산업진흥법 사례 검토 및 분석

### 나. 입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 등 개최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자문

- 예술계 및 입법 전문가 자문

### 다. 입법 필요성 및 고려사항

- 예술의 산업화 논의에서 필요한 사항 및 대응방안 제시
-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

### 라. 법안 구성(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요 개념 정의
- 조문별 검토내용
- 세부조문별 입법취지, 관련 입법례 등

### 마. 예술산업진흥법 제정 기대효과



## II. 예술의 산업화 법제의 필요성

---

## 1. 예술산업에 대한 기존 논의

- o 예술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새예술정책」은 14대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제시
  - 여기에서는 예술의 산업화를 “상품화를 통한 경제가치 추구가 아니라, 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단계의 합리화와 체계화, 곧 예술 구조의 산업화를 통한 예술의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함을 밝힘
- o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진행됨
  - 보고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예술진흥정책이 주로 예술가의 창작지원과 국민들의 향수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예술창작 및 유통공간 등 공급량 증가에 따른 외형적 시장규모 증가에 비해 ‘예술의 산업 기반’은 미흡함을 지적
  - 보고서는 예술산업 개념이 문화산업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입장 곧 예술의 상품화 및 획일화를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술시장 창출, 예술의 가치사슬구조 확장으로 궁극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
  - 종합적인 검토 끝에 보고서는 예술산업을 “공연, 미술, 공예, 문학, 사진 등의 예술분야에서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규정
  - 보고서는 또한 산업정책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예술산업정책의 필요성을, 모든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개입을 통해 정태적, 동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짐을 지적하고, 예술산업 정책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이라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결론적으로, 예술분야 내부에서도 산업 친화적 분야와 덜 산업친화적 분야가 있어 이를 구분하면 예술분야 전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됨을 지적하면서, 시장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예술적 창작활동은 예술산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 또한 예술산업 정책 영역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높은 수준에는 대부, 지불보증 등 금융지원, 상업유통공간 확보, 해외마케팅 지원, 작품제작 지원 등을 제시하고, 낮은 수준으로는 예술시장을 조성하는 활동을 포함
- o 2007년 이루어진 「예술의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예술경영지원센터)도 당시의 이와 같은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것임
  - 보고서는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예술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차원으로 전환시켜

검토하고, 기초예술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활성화하여 ‘예술기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제시

- o 참여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와 같은 예술산업에 대한 관심은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음. 곧, 문화예술 영역을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문화산업 영역에 대한 관심이 예술영역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 영역과 달리, 예술산업에 대한 논의는 예술산업에 대한 일부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술관련 시장이나 관련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식아래 점차 약화되어 사라짐
- o 박근혜 정부에서 2000년대 중반의 예술산업 논의가 다시 나타남.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수행. 이 보고서는 예술산업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예술의 산업화를 “순수예술의 기획, 창작, 유통, 소비를 경제적 타당성으로 재구조화, 체계화하여 경제적 잉여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시. 또한 예술산업의 영역을 예술창작산업, 예술복제산업, 예술유관산업으로 구분.
- o 뒤이은 2016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예술산업의 가능성을 다시 모색. 이 포럼의 발표에서는 예술산업을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창조활동을 통해서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또는 관련된 분야”로 보고, 예술의 산업화를 “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시장규모의 확장을 통해 예술관련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결론으로 예술의 산업화는 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시장규모의 확장을 통해서 예술관련 영역을 확장시키고, 예술산업의 구조는 세분화되고 모듈화되어야 함을 제시
- o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산업과 관련한 논의의 역사가 짧지 않으며, 예술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 이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왔다는 점임. 또한 예술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짧지 않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나 실천의 진전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는 예술에 대한 산업적 접근의 부적절성, 예술산업 범위 규정의 어려움, 예술시장의 협소함을 비롯한 예술산업 관련 환경의 미성숙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 예술산업 진흥 법제화 필요성

- 2000년대 중반부터 예술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되지 못한 배경에는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예술 관련 시장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의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음
  - 예술산업에 어떠한 분야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음. 산업화 할 수 있는 예술 영역이 뮤지컬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과, 이미 출판이나 음반 등은 관련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술산업법에 규정을 받는 예술 분야를 어느 영역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예술산업과 관련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예술분야가 공적 지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시장 영역을 통해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음. 또한 예술을 중심으로 한 유통 영역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장되고 있는 측면도 예술산업과 관련된 법의 제정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음
  - 미술 분야에서의 옥션, 아트마켓 부상이나 공연 분야에서의 티켓 대행 판매 등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 분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예술품 수출액 5,348억원 (전년대비 4배 증가), 무역수지 흑자 2,939억원
  - 2015년 국내 미술 경매시장 낙찰총액 1,880억원 (전년대비 2배 증가)

<표 1> 국내 공연시장 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업체수	공연시설	732	820	944	1,034
	공연단체	2,440	2,214	2,108	2,284
합계		3,172	3,034	3,052	3,318
종사자수	공연시설	6,513	9,623	11,224	12,669
	공연단체	80,517	47,175	50,847	55,858
합계		87,030	56,798	62,071	68,527
매출액	공연시설	230,365	327,441	377,169	368,890
	공연단체	232,208	221,872	335,876	390,425
합계		462,573	549,313	713,045	759,315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p. 46-47

\* 공연단체는 격년조사로 시행, 2년마다 전체 시장규모 산출

\* 시장규모는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매출액(자체수입<sup>1)</sup> 및 기타수입) 합산액으로 계산함

1) 공연시설 자체수입 항목은 공연입장수입, 공연장대관수입, 기타 공연사업수입(프로그램 판매 등), 공연 외 사업 수입(교육사업 등) 등이며, 공연단체 자체수입 항목은 작품 판매 수입, 티켓 판매 수입, 공연

<표 2> 국내 미술시장 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수	주요유통 영역	337	370	421	445	478	478
	공공영역 (미술관)	142	160	175	172	185	203
합계		479	530	596	617	663	681
종사자수	주요유통 영역	1,289	1,555	1,583	1,554	1,488	1,574
	공공영역 (미술관)	(조사하지않음)	1,313	1,645	1,716	1,638	2,009
합계		-	2,868	3,228	3,270	3,126	3,583
작품거래 금액	주요유통 영역	321,619	379,841	377,429	366,816	255,746	288,403
	공공영역	86,885	103,775	94,831	73,702	69,181	61,243
합계		408,504	483,562	472,259	440,518	324,927	349,646

\*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2015 미술시장실태조사, p. 36~40

\* 주요 유통영역은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를 지칭함

\* 작품거래금액 중 공공영역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은행, 미술관 등에서 거래된 실적임

o 그 동안 예술 창작 활동과 관련하여 공적 지원은 주로 예술가의 창작지원과 국민들의 향수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예술창작 및 유통 공간 등 공급량 증가에 따른 외형적 시장규모 증가에 비해, ‘예술의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 지원은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 왔다고 할 수 있음

- 예술분야 지원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 대상 소액다건 창작보조금이 대다수를 차지. 행사 위주 지원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 형성
- 예술산업 영역은 예술 영역에서는‘영리’라는 이유로, 산업 영역에서는‘큰 비중이나 의미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러한 가운데 비체계적인 생산, 유통 관행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예술소비자의 소비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정 유통업체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나 갤러리와 옥션사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한 시장 가격 왜곡 등의 문제 발생 여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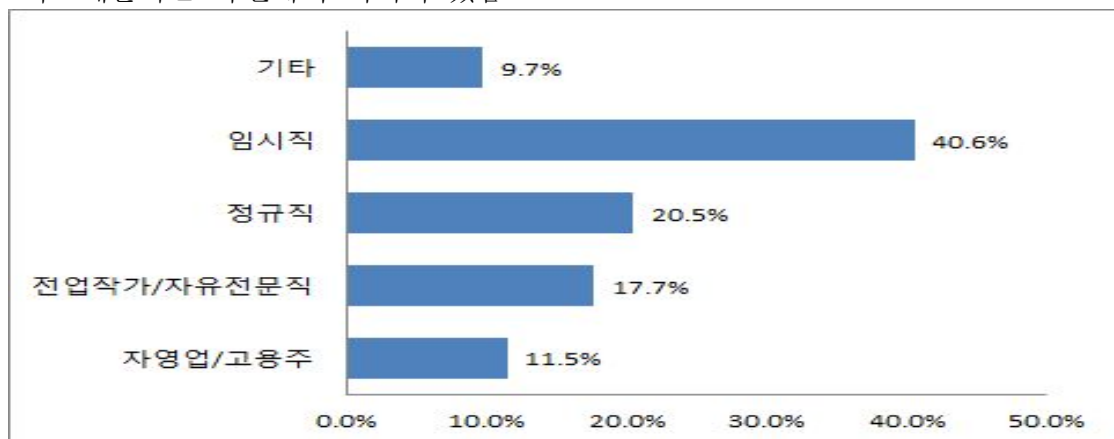
o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산업적 생산의 틀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다양한 생산, 유통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수공예품 거래사이트 'Etsy' 증시 상장(1조원), 메트 오페라 영상물 사업 연수익 400억원 등 기초 예술분야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 상품화, 유통망 개척,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장

출연료, 기타 공연사업 수입(기획 및 홍보대행 등), 공연 이외 사업수익(워크숍, 세미나 등) 등임

### 3. 예술산업법을 통한 예술산업 진흥의 의의 및 기대효과

- o 예술산업법은 국가로 하여금 예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예술활동의 활성화 및 예술활동 영역 확대에 기여함
- o 예술산업법은 ‘예술을 산업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적 생산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생산 및 유통구조를 체계화하고 합리화함과 동시에 예술산업 영역 및 이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에 있음. 나아가 산업화 될 수 있는 예술 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 예술산업법은 예술 분야에 종사하지만 영리적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그동안 공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분야에 대해 산업적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는 예술 활동 영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한 예술산업 전 분야에서 다양한 인력들의 창의적 시도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영리 및 비영리 분야 예술 창작 활동 모두에 자극제로 작용
-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술 유관 영역 종사자들은 많은 경우 비정규, 임시직의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예술 영역이 주로 공공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예술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예술산업 활성화는 예술영역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안정된 고용 형태나 고용 조건 속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1> 청년예술가 고용 형태

\* 출처: 김선애(2014),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 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 24

- o 순수, 비영리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하여 지원하고, 영리 또는 영리적 성격을 가진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예술산업법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이 영리와 비영리 영역 모두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보다 확장된 예술 향유 및 소비의 기회를 제공함
- o 예술 시장이 확대되면서 예술 소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바, 예술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예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예술 상품 및 소비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산업법을 제정함으로써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 기반 마련
- o 기존 산업의 생산 및 유통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술관련 영역들의 산업 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관행에 의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예술산업 생산 및 유통구조를 합리화는 효과를 기대함

#### 4. 해외 예술산업 진흥법 사례

##### 1) 영국

- o 영국은 예술산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없으나 창의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있음. 영국에서 창의산업은 미디어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주로 ‘미디어와 창의산업’(Midia and creative industry)의 형태로 논의됨
- o 영국의 미디어와 창의산업은 영국 수출의 매 10파운드당 약 1파운드 가량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정부는 재정지원, 국내외에서의 홍보/마케팅(promotion) 지원,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o 지원의 방향은 한편으로 산업 발전, 다른 한편으로 시민(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취해짐
- o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산업 콘텐츠 프로듀서들을 지원. 예를 들어 영화 제작자, TV 프로듀서, 애니메이션이터, 비디오 게임 제작자 등에 세금 감면 또는 할인 혜택 등(Tax breaks)을 제공
  - 영국 영화에 대한 세금감면 및 할인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매년 160백만 파운드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012년 영국 정부는 2013년 4월

부터 최고의 TV 프로덕션,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 제작업체들도 영화 분야와 유사한 세금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발표. 예를 들어, 영국 영화로 인정받은 영화 제작자들은 20백만 파운드 이하의 비용이 들어간 영화는 비용의 최고 25% 까지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백만 이상이 투입된 영화의 경우 비용의 20%까지 신청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2013년 4월부터 최고의 TV 프로덕션,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 제작업체들도 25%선의 세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국내, 해외에서의 창의산업 활동에 대한 프로모션(promotion) 지원 제공. 프로모션 내용으로는 영국 창의기업이 해외에서 영국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business trip'을 조직함. 또 견본시(trade fairs), 시장 정보(market intelligence), 해외 출장 지원(overseas trip support)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마켓 소개서비스(Overseas Market Introduction Service)를 통해 해외마켓에의 진출 지원
- o 예술산업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The Live Music Act 2012를 살펴볼 수 있음. 이 법률은 예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다양한 공연활동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 법률에는 허가(licences) 등이 없어도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 공연(live performances)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구체적으로는 Pub에서 이루어지는 아마추어 공연(음악이나 연극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Live Music Act는 2012년 10월에 시행되었으며, 제한적으로 특정 장소나 환경에서 규제들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 미국

- o 미국에서는 2016년 예술가와 사업가(entrepreneurs)들이 보다 쉽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the Comprehensive Resources for Entrepreneurs in the Arts to Transform the Economy (CREATE) ACT 법안을 도입. 구체적으로는 예술가, 미술관, 박물관, 예술분야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그들의 작업을 지역사회와 보다 용이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들이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o 이 법안은 예술산업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법안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술가와 사업가(entrepreneurs)들이 예술유관사업들을 창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박물관과 다른 문화시설들에 대한 지원, 세 번째 부분은 지역 사회내 예술활동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예술가와 사업가(entrepreneurs)들이 중소대출기관이나 규제관련 기관(micro-lenders, traditional lenders and regulators)들과 협력하여 소규모 대출(Micro-loan)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창조경제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targeted to meet the needs of the creative economy)
-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및 지역개발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등이 인큐베이팅,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 재정지원 수단들로 예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가들이 예술작품 창작비용(the value of the materials used to create the artwork)보다 예술작품 판매가격(the sale value of a piece of artwork)에 기초하여 세금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update)토록 함
- 지역 사회내 예술 및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장을 위해 연방기관인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CNCS) - 이 안에는 AmeriCorps, Senior Corps, the Social Innovation Fund, the Volunteer Generation Fund 등 다양한 기관들이 속해 있음 - 안에 예술가 조합(Artist Corps)을 설치토록 함
- 외국 정부가 미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 예술작품을 대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미국 기관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해외 시각, 공연예술가들의 비자절차를 신속히 진행토록 함으로써 미국 학생이나 가정이 문화, 교육 기회들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함

### III.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

## I. 예술산업의 구성요소

### 1) 예술산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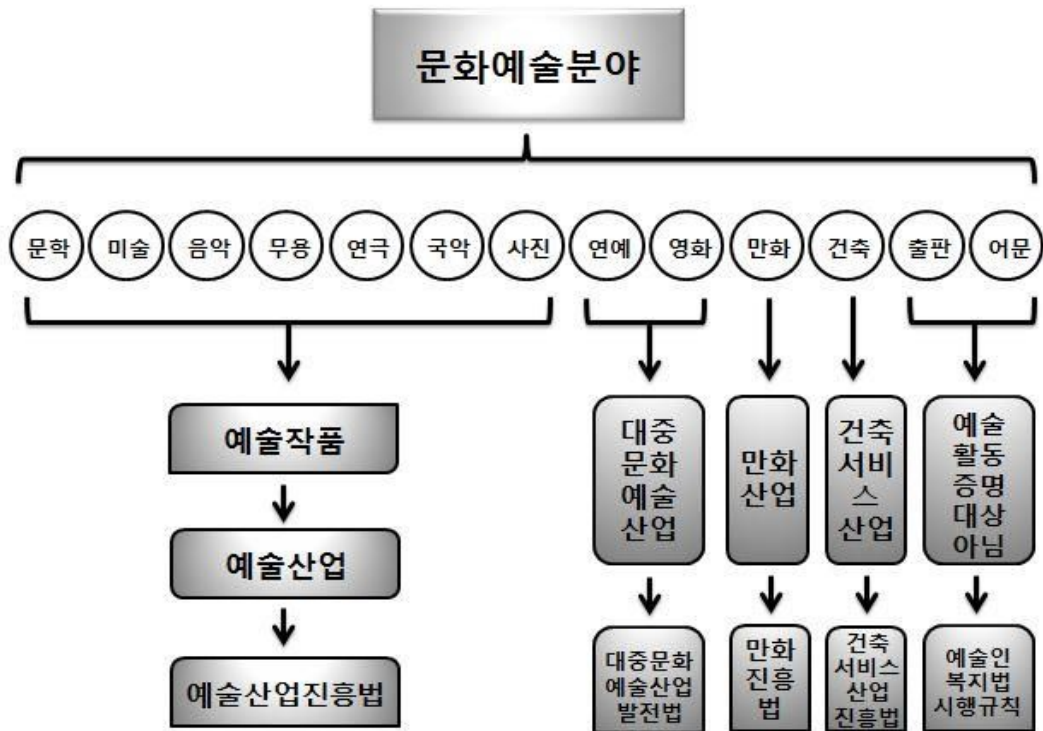
- o 이 법안에서 예술산업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 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여 예술산업의 범주를 정의함
- o 예술산업 개념은 예술분야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
  - 예술산업의 물적 요소 : 예술작품/예술부가상품
  - 예술산업의 인적 요소 : 예술가/예술사업자/예술소비자

### 2) 예술산업의 물적 요소 1 : 예술작품

- o 예술산업은 예술작품이라는 물적 요소가 기초가 됨
  - 예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예술소비생활에 제공하거나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개발된 유·무형의 창작물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로 정의됨
- o 예술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 → 예술산업의 분야
  - 연예, 영화 분야 → 대중문화예술산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예술산업 정의 단서에서 제외함
  - 만화 분야 → 만화산업 : 만화진흥법
  - 건축 분야 →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출판, 어문 분야 → 예술활동증명 대상 아님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 ※ 예술산업진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과의 관계

- 예술산업 정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외
- 예술가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중복되지 않음
- 예술사업자 정의에서 대중예술사업자 제외
- 예술산업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는 예술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음



<그림 2> 문화예술분야와 예술산업과의 관계

-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상품이나 콘텐츠와 구별
  - 예술작품은 일정한 예술분야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함. 특수한 인적 용역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규율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는 문화예술분야 중 연예 및 영화 분야에서 제작된 공연물, 방송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이미지활용제작물이 포함되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한다는 측면에서 콘텐츠와 구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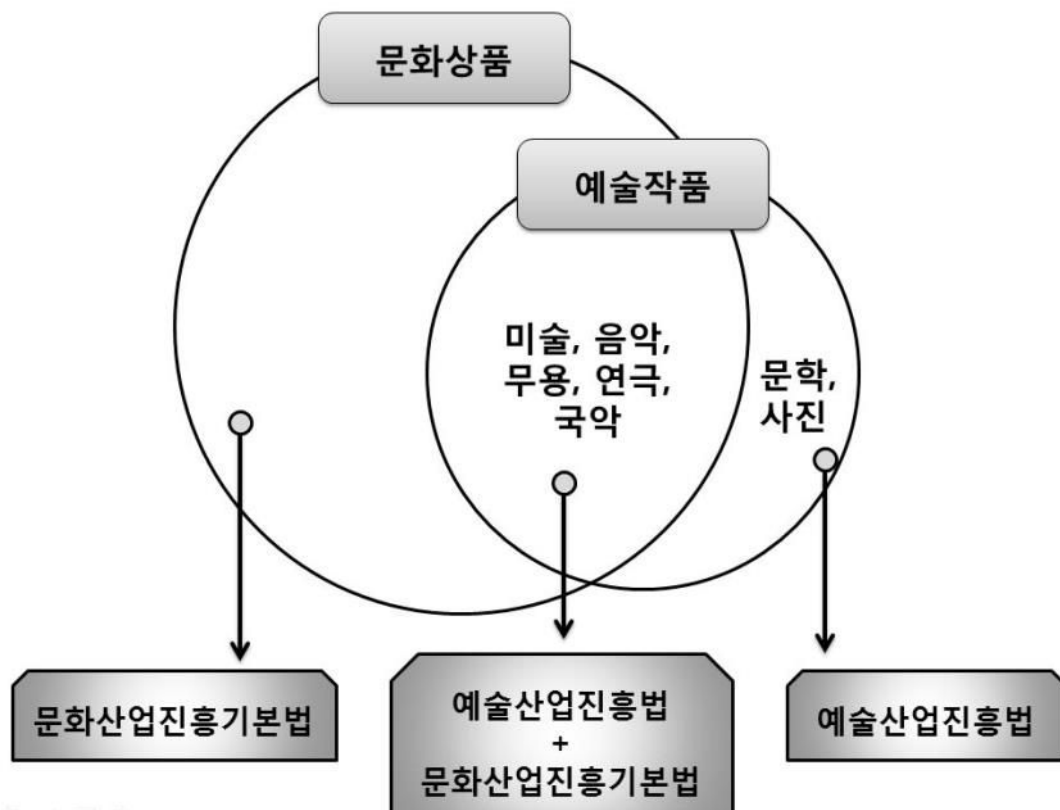
※ 예술작품과 문화상품과의 관계

- 예술작품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예술소비생활에 제공하거나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창작물
-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 문화상품의 의미 범주는 예술작품을 포괄하므로 모든 예술작품은 문화상품이 될수 있으나 모든 문화상품이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음. 이는 예술작품은 문화상품의 정의에는 없는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한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

- 문화상품에 적용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예술작품에 적용될 수 있으나 예술작품에 적용되는 예술산업진흥법은 모든 문화상품에 적용될 수 없음. 문화상품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적용되고, 예술작품에는 예술산업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함께 적용됨. 예외적이기는 하나 문학 및 사진 분야의 예술작품(출판되지 아니한 것)은 문화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예술산업진흥법만 적용됨

☞ 문화산업의 종류 중에서 “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이 예술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예술산업의 분야 중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분야는 문화산업에 속하는데 “문학, 사진” 분야는 문화산업에서 열거되지 않아 문화산업에 포함시킬 수 없음. 따라서 문학 및 사진 분야의 예술작품은 문화상품이 될 수 없음. 다만 문학 및 사진 분야의 예술작품이 출판되는 경우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에 포함되므로 우회적으로 문화산업에 포함될 수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예술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같은 위상에 있음



<그림 3> 문화상품과 예술작품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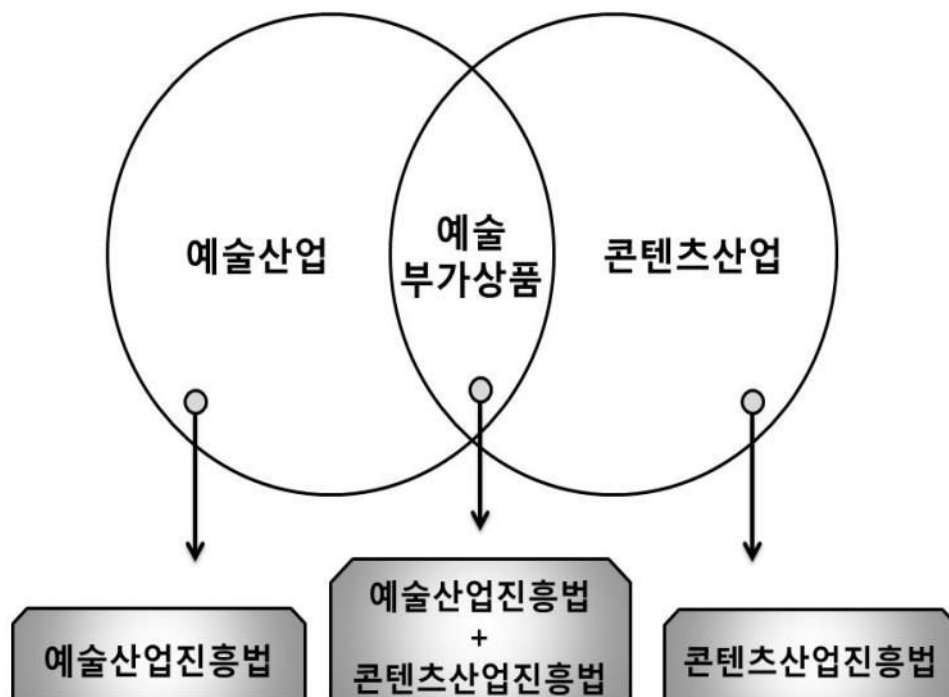
### 3) 예술산업의 물적 요소 2 : 예술부가상품

o 예술부가상품은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이거나 예술작품에서 파생되는 콘텐츠를 의미

- 예술부가상품의 대부분이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예술부가상품에는 예술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함께 적용됨. 그러나 예술작품이 중심이 되는 예술산업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콘텐츠산업에도 예술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음

#### ※ 예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구별

- 예술산업은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콘텐츠화하고 복제·유통하는 구조이나 콘텐츠산업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복제유통하는 구조
- 예술산업은 예술작품의 제작에 투입되는 예술가의 예술용역이 필수요소이나 콘텐츠산업은 기술용역을 통한 콘텐츠제작이 필수요소
- 예술산업에서 예술작품에서 파생되는 예술부가상품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일부분에서는 콘텐츠산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콘텐츠산업은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예술산업에 포함될 수 없음



<그림 4> 예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관계

#### 4) 예술산업의 인적 요소 1 : 예술가

-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핵심요소인 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예술산업을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과 구별시키는 표지 기능을 함
  - 예술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예술산업의 정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가의 범주에서 제외됨
  -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은 예술가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예술활동증명을 요한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없이 예술용역을 제공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예술가와 구별됨. 다만 현실적으로는 예술가와 예술인은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예술가는 연습생이나 신인, 경력단절 예술가를 포함하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과 예술활동증명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생과 신인, 경력단절 예술가가 포함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
  - 예술가는 자신이 직접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예술가의 지위와 제작자로서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됨

※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은 사업자인 제작업자 개념만이 존재하나 예술산업은 예술가와 예술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차이가 있음

#### 5) 예술산업의 인적 요소 2 : 예술사업자

- 예술산업의 인적 구성요소의 하나인 예술사업자는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예술사업자를 예술기획업자, 예술제작업자, 예술유통업자로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예술산업의 사업자가 기능별로 분화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투자자, 제작사, 유통전문회사 등으로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제작사와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함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개념적으로 볼 때 예술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예술산업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예술사업자의 정의에서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음.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예술사업자가 될 수 없음

- 예술산업진흥법은 예술사업자 중에서 기획업에 해당하는 예술기획전문회사를 별도로 분화시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예술산업진흥법의 정부유도형 산업진흥정책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가 먼저 예술사업자에서 분화될 것으로 기대됨

## 6) 예술산업의 인적 요소 3 : 예술소비자

- o 예술소비자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말함.
  - 예술소비자의 최종소비 방식은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예술소비방식을 포괄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소비자라는 용어를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이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예술산업진흥법에서는 두 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술소비자라는 용어 사용
  - 예술산업진흥법은 예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예술소비자의 산업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통해 예술산업을 진흥하고자 함

## II. 예술산업에 관한 독자 진흥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한 예술산업 진흥의 난점

- o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공간의 설치(제2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제3장), 문화예술진흥기금(제4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제5장)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법제라 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지원, 예술의 산업화 등의 조류는 반영하고 있지 않아 문화예술 진흥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o 1995년에 전면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산업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을 규정한 바 있으나,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으로 이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결과물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정과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의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문화산업의 진흥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리시켜 독자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진흥법 체계라는 문제의식으로 1999년에 문화예술 창작에 부수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문화산업 정의와 진흥체계를 가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게 됨
- 예술의 산업화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논의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전제가 된 문화산업 진흥의 독자적 입법체계 도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간에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정부의 직접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실패를 전제로 하여 시장경제 체계 밖에서 정부개입을 통해 문화예술을 진흥하려는데 비해,
  - 예술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체계는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제 체계를 통해 문화예술을 진흥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법률에서 양자를 함께 규율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과 예술산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면 전혀 다른 두 법원리가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정책의 충돌 및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큼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예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예술창작·문화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복지 분야와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사업자육성을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및 예술산업 진흥 분야 간에 정책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예술가의 경우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정책과 사업자 육성정책이 양립할 수 없어 양 정책이 모두가 실효

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예술사업자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가 지위를 겸하지 않는 전문적인 예술사업자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대상에 예술사업자를 포함될 수밖에 없어 기금의 설립취지가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함

- 문화공간 운영자의 경우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정부의 직접 지원대상이나 예술산업의 관점에서는 예술유통사업자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산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면 문화공간이 직접 지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규제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정책방향의 혼선이 발생하며,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예술산업의 관점에서는 산업 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 발생
- 문화예술복지에 관한 사항은 예술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소비자의 문제인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복지와 예술소비자가 함께 규정되면, 특정한 예술소비자에게 정부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예술소비자 전체에 대한 법적 규율에 혼선이 발생 우려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통한 예술산업 진흥의 난점

- 예술산업의 진흥에 대한 법제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예술 산업화의 기본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의 범주를 보면 콘텐츠산업 이외에도 영화, 음악, 출판, 미술, 공연, 대중문화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가 포괄되어 있어 예술산업도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범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산업의 진흥에 대해 독립한 입법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산업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으로 예술산업을 문화산업에 포괄시킬 수 있는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문화예술의 13개 분야 중에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출판, 만화 등 9개 분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으나, 문학, 사진, 건축, 어문 등 4개 분야는 문화산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문화산업 정의에 포함시키면 입법적으로 예술산업 대상이 되는 분야 전체를 문화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이와 같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의 정의를 개정하면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제반 제도를 예술산업 진흥에 적용시킬 수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제도로 예술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가?
  -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제도로 예술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임
  -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창업·제작·유통(제2장), 문화산업 기반조성(제3장), 문화산업전문회사(제6장)이 규정되어 있으며 인적·물적 기반조성과 투자와 자금관련 조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
  - 문화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문화산업의 범주에는 영화와 게임산업과 같이 대기업이 존재하고 수익성이 커서 투융자가 용이한 산업도 있고, 공예산업과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 중심의 산업도 있으며 게임과 같이 예술가가 포함되지 않는 문화기술 중심의 산업도 있고 음악같이 예술가 중심의 산업도 있으며 미술품과 같이 예술가의 개별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 있고 연극같이 협동작업을 산업도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이라는 범주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 정의의 포괄범위가 매우 넓어 예술산업의 속성도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예술산업이 아닌 순수 콘텐츠산업이나 기타 문화산업의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반 제도가 예술산업에 적합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하기 어려움
  - 예술산업의 현재 여건을 보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독립제작사에 관한 사항, 문화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 단지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대규모의 콘텐츠산업에 맞추어져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반 제도가 소규모 사업자 중심이며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산업에 적절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예술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안
  -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반 제도가 예술산업에 적절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하여 예술산업에 특유한 사항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이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문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지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는 데 있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특정한 영역의 문화산업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문화산업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술산업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옴
  - 예술산업이 문화산업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다른 문화산업에는 적용될 수 없는 예술산업의 특유한 사항을 문화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에 적용하면 법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산업에 적용이 전제되었던 제도가 다른 문화산업

에도 적용되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기본체계는 개별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하나하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개별 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 정의 조항에서 이를 새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은 문화예술진흥법도 동일한데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분야를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문화예술 정의 조항에서 새로운 분야를 새로이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
-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예술산업에 특유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수많은 문화산업의 개별 산업 중에서 산업규모가 크지 않고 예술가 중심의 예술산업을 특별히 취급하여 특유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3) 문화산업법제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예술산업법의 성립가능성

- 문화산업법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별 문화산업 관련 진흥법을 개별법으로 구성하고 있음
- 개별 문화산업 진흥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사항과 함께 개별 문화산업에 적용되어, 문화산업의 일반적 사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통해 그리고 개별 문화산업의 특유한 사항은 개별 문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적용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음
-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07), 인쇄문화산업진흥법(200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콘텐츠산업 진흥법(201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이 개별 문화산업 진흥법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된 바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 정의 조항에서 열거하는 문화산업의 범주와 관련 개별 진흥법과의 관계는 <표 1>과 같음. <표 1>에 따르면 문화산업 관련 개별 진흥법이 제정되지 않은 문화산업의 범주는 방송영상물에 관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캐릭터·애니메이션·공연·미술품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전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 할 수 있음

<표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산업의 범주 및 관련 개별진흥법

문화산업의 범주	관련 개별 진흥법	비고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07) - 인쇄문화산업진흥법(2007)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없음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없음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12) - 콘텐츠산업 진흥법(2010)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 -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	- 캐릭터·애니메이션·공연·미술품 관련 법률 없음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 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2012)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2015)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없음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문화산업의 한 범주로서 예술산업에 대한 개별 진흥법의 제정방안
  - 예술산업이라 주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연·미술품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 영역인 축제에 관련된 산업은 문화산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술산업은 문화산업의 한 범주라 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의 범주 중에서 공연·미술품과 관련된 산업 및 축제에 관련된 산업은 개별 진흥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영역으로 예술산업 진흥법이 기존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과 중복되지 않은 독자적인 개별 문화산업 진흥법으로서 제정될 수 있음.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법이 있으나 이는 규제입법으로 진흥법이 아니므로 개별 진흥법이 부재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산업 진흥법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산업법제의 하나로 제정되는 경우 예술산업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적용과 함께 예술산업 진흥법이 적용됨
  - 입법적으로 예술산업의 대상이 되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 중에서 문학과 사진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문화산업의 범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그러나 문학과 사진이 유통되는 경우 주로 출판의 형식이 가진다는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문화산업의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학과 사진 분야의 성격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사항이 당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문학과 사진의 진흥에 필요한 제도를 예술산업 진흥법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음

#### 4) 국내 문화산업 관련 개별 진흥법의 사례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영화산업”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 포함, i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영화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 iii)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이 있음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음악산업”은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ii)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iii)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등이 있음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게임산업"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ii)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 iii) 게임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책 추진, iv)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v) 게임물 등급분류 등이 있음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을 따로 제정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7. 7. 19. 법률 제8533호로 일부개정된 후 2008. 1. 20. 시행하게 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ii) 출판사의 신고, iii)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iv) 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이 법은 인쇄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 7. 19. 법률 제8532호로 제정되어 2008. 1. 20.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ii)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iii)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iv)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v) 인쇄사 신고제도 등이 있음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 6. 5. 법률 제9098호로 제정되어 2008. 12. 6. 시행됨
- 이 법의 진흥 대상인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를 의미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ii) 정기간행물 발전을 위한 지원, iii)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 등이 있음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 2. 17. 법률 제11311호로 제정되어 2012. 8. 18.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ii) 만화가, 만화산업자 등에 대한 지원, iii)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 강구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이 있음

#### ○ 콘텐츠산업 진흥법

-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2010. 6. 10. 법률 제10369호로 전부개정한 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2010. 12. 11. 시행하게 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콘텐츠’의 개념 등의 재정립, ii)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개편, iii)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iv)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v)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이 있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2016. 2. 3. 법률 제13956호로 제정되어 2016. 8. 4.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ii)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iii)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iv)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 등이 있음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2015. 5. 18. 법률 제13299호로 제정되어 2015. 11. 19.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공예문화산업”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ii)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iii) 창업 및 제작 지원, iv)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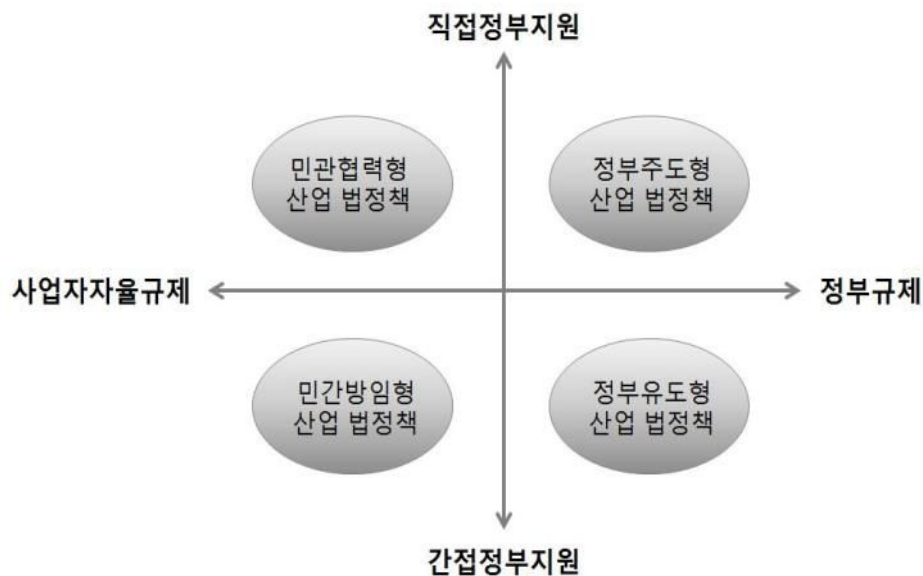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49호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됨
- 이 법의 대상산업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고 함)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의미함
-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 i)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ii)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iii)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이 있음

### III. 법체계의 구성

#### 1) 산업 진흥 및 규제 법정책의 유형

- 법정책적으로 산업에 관한 규율체제는 진흥과 규제로 대별됨
- 산업진흥 및 규제 법정책의 유형은 ① 정부지원의 직접성·간접성 여부, 그리고 ② 정부규제·사업자자율규제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음(<그림 5> 참조)
  - 유의할 점은 정부지원의 직접성·간접성과 정부규제·사업자 자율규제는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것
  -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정부의 직접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역시 ‘민관협력’의 공동규제모델의 등장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음
  - 따라서 아래에서 논의하는 산업진흥 및 규제 법정책의 유형은 현실이 아니라 ‘이념형(ideal type)’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산업진흥 및 규제 법정책의 유형

#### (1) 정부주도형 산업 법정책

-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와 정부의 직접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법정책임
- 형사벌과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의 강제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의 지급이나 세제지원 등 기업에 직접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법정책임

- 현실적으로 강한 법적 규제와 산업진흥을 위한 직접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시급히 진흥시켜야 하나, 산업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가 부여된 산업의 경우 정부주도형 산업 법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유형의 법정책은 막대한 집행비용을 수반한다는 단점이 있음
- 정부의 주도로 산업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일어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직접지원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함

## (2) 정부유도형 산업 법정책

- 정부는 산업에 대하여 직접규제를 하지만 진흥정책은 간접적인 정부지원을 위주로 하는 법정책임
- 이 유형의 법정책의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문화산업에 대한 법정책은 이 유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의 산출물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의 사회적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유도형 산업 법정책이 실시됨
- 기업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 직접지원 보다는 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위주로 함
- 산업진흥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정부주도형 산업 법정책에 비해서 집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어렵지 않음
  - 하지만 정부의 직접규제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문제는 있음
- 여전히 정부실패의 위험성은 있지만 정부주도형 산업 법정책에 비해서 심각한

것은 아님

- 정부유도형 산업 법정책은 산업의 산출물이 갖는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민관협력형 산업 법정책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이의 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함
  -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직접규제가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3) 민관협력형 산업 법정책

- 정부는 산업진흥을 위해 직접지원 정책을 시행하지만 산업규제는 정부의 직접 규제가 아닌 사업자 자율규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법정책임
  - 여기서 정부는 직접규제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
  - ‘민관협력형’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직접규제 요소를 약화시키고 사업자 자율규제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 유형의 법정책의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법정책도 그러한 예이고, 일부 문화산업 법정책도 그러함
- 법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사업자의 합의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책은 집행비용의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음
- 이 유형의 법정책에서 정부실패는 거의 문제되지 않음
- 민관협력형 산업 법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는 주로 사법적(私法的)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
  - 즉, 정부는 형사벌과 행정제재를 통해 정부규제를 직접 강제하기 보다는 주로 사법적 효력을 갖는 법규정의 제정을 통해서 민간의 합리적인 산업질서를 형성시키는 것임
- 유형의 법정책은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초기단계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실시할 수도 있음

#### (4) 민간방임형 산업 법정책

- o 정부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을 할 뿐이며, 정부규제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의 질서를 형성함
- o 민간협력형 산업 법정책에 비해서 사업자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산업진흥에 대한 정부지원도 소극적임
- o 이 유형은 고도로 성숙한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단지 ‘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정도를 하는 산업 법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 보다는 산업이 성숙단계로 진입한 국가의 법정책으로는 적절함
  - 그러나 고도화된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의 경직성 때문에 여전히 민간방임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이전의 법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 정부지원사업의 경우도 예산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음

#### 2)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법정책 모형

- o 예술산업에 대한 법정책은 이상에서 논의한 네 가지 산업 법정책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논의를 요함
- o 우선 예술산업이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아야 함
  - 예술산업의 사회적·문화적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제조업에 비할 때 예술산업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예술산업은 정부가 직접 육성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임
  - 또한 예술산업은 ‘고수익·고위험’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지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o 위와 같은 관점에서는 예술산업에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직접지원 법정책을 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 현재 예술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사회적·문화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에 역기능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면 고도화된 성숙한 산업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음
  - 현재 예술산업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숙한 산업구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자 자율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 정리하면 예술산업에 적절한 산업 법정책으로는 정부유도형 산업 법정책 또는 민관협력형 산업 법정책일 수밖에 없음
  - 즉, 정부유도형 산업 법정책을 위주로 하면서 민관협력형 산업 법정책의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법정책의 적용이 예술산업에 적절할 것임
  - 이는 진흥과 규제 균형의 통하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입법 목적을 구체화한 것임
- 정부유도형 산업 법정책과 민관협력형 산업 법정책이 결합하는 양상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유도형인가 민간협력형인가 그리고 산업진흥 법정책인가 산업규제 법정책인가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의 법정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음
  - ※ 민간협력형 산업 법정책에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 급부와 같은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예술산업에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법정책 모형 논의에서 이를 제외함

	정부유도형	민관협력형
산업진흥 법정책	산업의 비용 감축을 위한 기반 조성 과 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산업규제 법정책	공법적 규제	사법적 규제

<그림 6>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법정책 모형

### (1) 정부유도형 산업진흥 법정책

-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간접적 지원 법정책으로 산업의 비용 감축을 위한 기반 조성  
과 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룸
-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기반조성 사업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을 감축하여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법정책임

- o 산업종사자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역시 산업전반에 걸친 비용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 (2) 민관협력형 산업규제 법정책

- o 정부가 행정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종사자에게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종사자의 행위에 일정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질서형성적인 연성(軟性) 규제, 즉 사법적 규제를 수단으로 하는 법정책임
- o 산업종사자의 행위에 부여되는 일정한 사법적 효력이 인센티브로 작용하므로 산업종사자는 사법적 규제가 목표로 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임
  -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사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해도 그 결과로 인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도 일종의 인센티브로 볼 수 있을 것임
- o 사법적 규제는 산업의 성숙한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산업의 초기단계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
  - 산업의 미성숙 단계에서는 산업종사자들이 사법적 인센티브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적 규제의 위반에 일정한 과태료와 같은 약한 제재조치를 부가하기도 함
  - 이는 순수한 의미의 사법적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사법적 규제와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수반하는 공법적 규제가 결합한 ‘결합규제’라고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는 그 자체로서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사법적 규제는 산업종사자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유도형 산업진흥 법정책과 동일한 궤(軌)에 있음. 사법적 규제와 산업의 비용감축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모두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 방식임. 두 법정책의 결합이 이념적으로 가장 시장친화적인 규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3) 정부유도형 산업규제 법정책

- o 정부가 산업의 왜곡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형사벌,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수반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법정책임

- o 정부유도형 산업규제 법정책에서 사용하는 행정수단은 형사벌, 과태료, 등록취소 등 주로 공법적(公法的) 규제임
  - 공법적 규제의 적용례로 금지행위의 사회적 영향이 커서 사회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한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입법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공법적 규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 o 공법적 규제는 그 효과가 강력한 만큼 수범자(受範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따라서 행정규제의 목표에 따라 산업종사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임
  - 하지만 강한 규제라고 해서 반드시 수범자가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모든 범위반자를 적발하지 못하는 이상은 수범자는 자신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임
- o 질서유지적인 공법적 규제만을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질서형성적이고 인센티브에 기반한 사법적(私法的) 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공법적 규제의 효과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음
- o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대한 법정책 모형은 ①산업의 비용감축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법정책, ②사법적 규제 법정책, ③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의 결합규제 법정책, ④공법적 규제 법정책으로 구성됨.(<그림 7> 참조)
  - 네 개의 하위 법정책으로 구성되는 예술산업 규율 법정책 모형은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함



<그림 7>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법정책 모형 도식



### 3)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

#### o 법안의 명칭 :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법안의 명칭은 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
- 이 법안은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목표로 하므로 법안의 명칭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함
- 법명칭에 육성 또는 지원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주도 또는 정부유도 산업정책을 주로 나타냄
- ‘진흥’은 정부유도 산업정책 또는 민관협력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의미가 강하고 육성이나 지원에 비해서 사법적 규제 또는 결합규제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안의 명칭을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 하여 예술산업에 대하여 산업육성 및 지원과 사법적 규제·결합규제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함

#### o 법안의 목적(법안 제1조 참조)

- 예술산업진흥법의 목적은 “이 법은 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및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예술산업을 진흥하여 예술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함
- 이는 예술산업의 진흥정책 및 사법적 규제·결합규제를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또는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o 법안의 구성

- 이 법안은 위에서 제시한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법정책 모형에 따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이루도록 하여 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또는 발전을 가능하게 함
-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제4장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 30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에 대해서는 <표 3>을 참조)
- 법안의 구성체계는 예술산업진흥법이 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예술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각 조항은 각 장의 내용에 맞게 배치함.

#### o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으로부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총 5개 조항으로 구성

○ 제2장 예술산업 기반조성은 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되, 창업, 전문인력, 투자, 예술용품, 예술부가상품, 예술기획전문회사,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등의 설립 등을 포함

※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은 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식재산권기반 정책,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실태조사,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

○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에서는 예술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 불공정행위, 예술소비자 보호, 분쟁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

※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청약철회, 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예술소비자보호지침, 분쟁조정 등 8개 조항으로 구성

○ 제4장 보칙은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3개 조항으로 구성

－ 부칙에는 2개 조항을 두고 경과조치를 규정

<표 4>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구성

장	조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	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
	제9조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10조	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11조	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	지식재산권기반 정책
	제14조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제15조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16조	실태조사
	제17조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18조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제19조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제20조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제21조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22조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제23조	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4조	청약철회
	제25조	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6조	예술소비자보호지침
	제27조	분쟁조정
제4장 보칙	제28조	수수료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0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o 예술산업 규율을 위한 법정책 모형에 따라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통한 지속적 인 예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①정부유도형 산업진흥 법정책 : 산업의 비용감 축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②민관협력형 산업규제 법정책 : 사법적 규제(결합규제를 포함), ③정부유도형 산업규제 법정책 : 공법적 규제 로 법체계를 구성(<표 4> 참조)

① **정부유도형 산업진흥 법정책**과 관련하여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4조(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 조성 제6조(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예술기획 전문회사 지원),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11조(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지식재산권기반 정책),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제16조(실태조사),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13개 조문이 있음

※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유도형 산업진흥 법 정책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산업 의 비용감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② **민관협력형 산업규제 법정책**과 관련하여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제15조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18

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제20조(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제21조(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22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4조(청약철회),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6조(예술소비자 보호지침), 제27조(분쟁조정) 등 11개 조문이 있음

- ※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사법적 규제는 사법적(私法的) 효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정이 제시하는 행위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은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결과적으로 예술산업 전체에 이익에 된다는 산업종사자의 확신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사법적 규제는 공정한 예술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민관협력형’이라 할 수 있음. 제27조 분쟁조정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을 규정하고 있음. 예술산업은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 및 예술사업자 간에 많은 법적 분쟁이 있는데, 제3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에서 규정하는 사법적 규제들이 정착한다면 상당부분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③ **정부유도형 산업규제 법정책**과 관련하여 제4장 보칙 제28조(수수료), 제30조(과태료) 등 2개 조문이 있음

- ※ 제4장 보칙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공법적 규제는 예술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공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예술산업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정부규제를 통한 강제를 전제로 함

<표 5> 예술산업 법정책 모형에 따른 예술산업진흥법 내용의 분류

정부유도형 산업진흥 법정책	민관협력형 산업규제 법정책 (사법적 규제)	정부유도형 산업규제 법정책 (공법적 규제)
제1장 제1조~제2조 (공통 법정책)		
제1장 제3조~제4조		
제1장 제5조(공통 법정책)		
제2장 제6조~제14조		
	제2장 제15조	
제2장 제16조		
	제2장 제17조~제18조	
제2장 제19조		

	제3장 제20조~27조	
		제4장 제28조
	제4장 제29조(공통 법정책)	
		제4장 제30조
	부칙 제1조~제2조(공통 법정책)	
13개 조문	11개 조문	2개 조문

※ 공통법정책 6개 조문(부칙 2개 조문 포함)

- o 이 법안에서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같은 제재조치가 수반됨(자세한 내용은 <표 5> 참조)
- 과태료는 공법적 규제의 전형적 유형 중 하나임
  - 사법적 규제의 경우도 수범자의 행위를 보다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조치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를 결합규제라고 할 수 있음
  - <표 3-3>에서 제15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5항, 제19조 제7항을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의 결합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산업의 미성숙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력하게 법 준수를 유도하려는 법정책의 산물임
  - 하지만 제재조항이 없다고 해도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가입, 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마련, 한국예술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 규정임
  - 이 규정들의 취지가 산업종사자에게 각인된다면 앞으로 굳이 제재조치가 없다고 해도 이 법 규정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예술산업의 관행으로 정착할 것임

<표 6>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사항

구분		위반시 제재조치	
조문	내용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백만원 이하)
15조2항	통합전산망 가입	●	
25조3항	시정명령 위반	●	
26조5항	시정명령 위반	●	
19조7항	유사명칭 사용		●

#### IV.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문 해설

---

##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예술산업을 진흥하여 예술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I. 조문의 취지

- 이 법이 예술산업 분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이 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예술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과 관련됨. 예술산업 용어에 대해서는 ‘예술의 산업화’, ‘예술의 산업적 활용’, ‘예술의 산업적 연계’, ‘예술기반산업(arts-based industry)의 활성화’ 등 다양한 이해가 있음
  - － 예술산업은 “예술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과 관련된 분야”로 규정되거나, “공연, 미술, 공예, 문학, 사진 등의 예술분야에서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과 관련된 산업”, “예술과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낳는 부가가치 창출형 산업활동” 등 해당되는 장르나 포함시키는 산업활동 영역, 문화적 가치 창출 등에 대한 언급 등 다양하게 나타남
  - － 예술의 산업화와 구조화에 대해서도 “상품화를 통한 경제가치 추구가 아니라, 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단계의 합리화와 체계화, 곧 예술 구조의 산업화”라거나 “순수예술의 기획, 창작, 유통, 소비를 경제적 타당성으로 재구조화, 체계화하여 경제적 잉여를 발생시키는 것”, “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시장규모의 확장을 통해 예술관련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것” 등으로 이해하여 각각 ‘예술 구조의 산업화’, ‘예술창작, 유통, 소비구조의 재구조화/체계화’, ‘분업화와 시장규모 확장’ 등의 측면이 다르게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개념 정의의 혼선이 예술산업에 대한 다양한 혼선들을 낳고 있는 만큼, 제1조에서는 예술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보다 예술산업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 Ⅲ.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 Ⅳ.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Ⅴ. 유사입법례

- 게임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



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음악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VI. 법안작업의 경과

- [제1안] 법안 작성 초기 단계에서는 문화예술분야 내에서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법률들을 살펴보고 목적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1안을 작성함
  - 기반 조성 : “산업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
  -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콘텐츠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산업디자인진흥법)....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이 법은 예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산업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술의 산업적 발전과 예술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o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많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게임산업진흥법)와 같이 문화적 삶의 질을 병기하거나,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와 같이 국민경제 부분을 제외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업디자인진흥법)와 같이 국민경제가 아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함
- o 기존 법안 사례들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거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은 예술산업과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제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이 법이 다른 산업(또는 외국의 동종산업)과 견주어서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제2안] 위 안에 대한 논의 가운데 가치평가적 용어의 부적절성이 지적되어 ‘합리적인 산업환경’용어를 삭제

이 법은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의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술분야에서의 건강한 생산 및 유통 환경 조성 과 예술의 산업적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o 기본적으로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므로, 이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경제나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법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적 조항을 다음과 같은 3안으로 작성함
- [제3안(최종안)]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목적 가운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변경하여 산업법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유통 및 소비’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예술소비자 권익보호’로, ‘예술시장 경쟁력’은 ‘예술산업 진흥’으로 조정

이 법은 예술의 산업적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산업과 관련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건강한 예술생태계 조성 및 예술산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안은 논의를 거쳐 현재의 규정을 마련함

##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산업”이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제외한다.
2. “예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예술소비생활에 제공하거나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개발된 유·무형의 창작물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예술부가상품”이란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공연·전시 과정에서 파생된 콘텐츠 등을 말한다.
4. “예술용역”이란 예술가의 창작, 실연, 실연의 지휘·연출·감독,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예술가”란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6. “예술사업자”란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기획·제작·유통업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외한다.
7. “예술소비자”라 함은 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예술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진흥법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호에서는 예술산업진흥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산업에 대해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 규정하여 예술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정함
- 예술산업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에 관한 것이어야 함. 예술작품과 예술부가상품에 대해서는 제2호와 제3호에서 별도로 정의함. 예술작품의 핵심요소는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한다는 점으로 이것이 콘

텐츠산업과 문화상품의 정의와 구별되는 징표임

-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라는 것은 문화산업의 정의에서도 유사문구가 보이는데 문화산업과 달리 문화상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획하고(기획), 이를 제작하며, 이를 유통시키며 예술소비자가 이를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서비스라 하는 것은 예술산업이 제조업이 아니라 예술가의 용역을 투입하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임을 의미함

- 개발 및 생산은 주로 예술부가상품에 관한 것임

- 제1호 단서에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이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별도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의 이중적용 문제를 배제하고 예술산업의 독자적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술산업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기 위함임

※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예술의 범주에 대중문화예술(영화 및 연예)이 포함되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도 예술산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술산업진흥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다른 예술산업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역기능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치산업의 육성 및 지원보다는 역기능의 규제라는 측면이 강조되므로 양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술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산업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진흥 중심의 예술산업진흥법과 규제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분리 적용하기 위해서 예술산업에 대중문화예술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말하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은 공연물(연극, 무용, 국악은 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 방송영상물(보도 및 다큐멘터리는 제외), 음악 및 뮤직비디오, 이미지화보 등을 제작하는 것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작업자에게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함.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주인 공연물, 영화 및 비디오물, 방송영상물, 음악 및 뮤직비디오, 이미지화보 등의 영역은 예술산업에서 제외됨.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의 제외조항 때문에 연극, 무용, 국악 분야는 예술산업 범주에 속함

○ 제2호에서 예술작품을 정의하고 있음. 예술작품 개념은 예술산업 정의의 핵심키워드이며 예술부가상품 개념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중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함.

이 요소는 예술산업의 범주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예술산업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7개로 한 것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것임. 첫째,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는 13개 문화예술분야 중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예술활동증명을 하는 분야로 정한 11개 분야를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않는 출판과 어문 분야를 예술산업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둘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규율을 받는 영화와 연예 분야는 이에 대한 별도의 산업규율 법률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셋째, 대중문화예술의 하나로 보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화 분야도 같은 취지에서 제외함. 넷째, 건축분야는 예술활동증명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는 하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서비스의 산업규모가 매우 커 이를 포함할 경우 산업의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이 예술의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으므로 이를 예술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함

- 둘째,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야만 예술작품이 된다. 따라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이 이용되지 않는 순수한 콘텐츠는 문화상품은 될 수 있어도 예술작품이 될 수 없음. 예를 들어 게임은 문화상품이 될 수 있으나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예술작품이 될 수 없음. 예술가 및 예술용역은 제4호 및 제5호에서 별도로 정의함
- 셋째, “예술소비생활에 제공하거나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개발된” 것이 예술작품임. 예술산업진흥법안에서 정하는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예술창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함. 판매되지 않더라도 예술소비자의 예술소비생활에 제공될 목적이어야 함. 따라서 예술작품은 예술소비자에게 유통시키려는 목적으로 예술가가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넷째, 예술작품의 형태는 “유·무형의 창작물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임. 유형의 창작물은 미술작품이 주로 해당하고, 무형의 창작물은 문학작품 등이 해당하며 예술용역의 복합체는 주로 공연 형식의 예술작품을 의미함

○ 제3호에서는 예술부가상품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작품에서 파생된 문화상품이나 콘텐츠를 의미함. 예술부가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함

- 첫째,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은 복제한 것이 예술부가상품임. 단순 복제 뿐만 아니라 복제하여 콘텐츠 형태로 제작한 것도 예술부가상품이 됨
- 둘째,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캐릭터나 스토리 보드 등 예술작품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한 것을 말함. 그 자체로는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으나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예술부가상품이 됨

- 셋째, 예술작품의 제작·공연·전시 과정에서 파생된 콘텐츠. 예술작품을 단순히 복제한 콘텐츠가 아니라 예술작품의 제작이나 공연, 또는 전시 과정을 콘텐츠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함
- o 제4호에서는 예술용역을 “예술가의 창작, 실연, 실연의 지휘·연출·감독,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예술활동은 예술작품을 제작하는데 제공되는 예술가의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함
  -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 영역을 창작, 실연, 기술지원으로 구분하는데, 창작과 실연은 대표적인 예술용역으로 볼 수 있음
  - 저작권법의 실연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실연의 지휘·연출·감독”은 실연의 하나로 규정되나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실연과 함께 예술용역의 하나로 규정함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에는 기술지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술지원은 창작과 실연에 비해 그 범주가 확장될 우려가 있어 의미의 모호성이 있음. 이에 따라 기술지원을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하여 의미를 구체화함
- o 제5호에서는 예술가를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함
  -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요하는 개념이어서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활동 증명 없이 없으면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예술산업진흥법은 예술인복지법과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굳이 예술인을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예술용역을 제공하는 한에서는 널리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 정의와 같이 예술용역을 제공하기만 하면 예술가로 인정하고 아직 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 즉 예술가 준비생의 경우도 적어도 계약을 맺었다면 예술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o 제6호에서는 예술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음. 예술사업자를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기획·제작·유통업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함
  - 예술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함. 여기서 예술산업은 제1호에서 정의하는 예술산업인데,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제외된 것을 말함
  - 예술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지만 예술사업자 정의에서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예술사업자로 정의함
  - “종사하는 자” 또는 “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모두 포함됨

- 제6호 단서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외”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사업자의 범주에서 제외함.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보면 예술산업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술사업자의 범주에서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제외하여 예술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함
- o 제7호에서는 예술사업자와 함께 예술산업의 한 축인 예술소비자를 정의함
  - 예술소비자는 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소비하는 자인데, “예술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예술소비자에 해당하며, 최종적이 아닌 중간재로서 소비하는 경우는 예술소비자가 아니라 예술사업자에 해당함
  - 예술소비생활은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권의 작용방식은 창작, 참여, 향유로 규정. 이 중에서 참여와 향유가 예술소비생활에 해당. 공연물, 전시물과 예술작품은 향유라는 형태로, 축제는 체험을 통해, 예술작품의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생활에 있을 수 있으며, 유형물과 같이 예술부가상품은 사용하고 무형물과 같은 예술부가상품은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음.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콘텐츠를 ‘이용’으로 규정

### III. 관련 조항

- o “예술산업”은 제1조(목적), 제2조 제6호의 “예술사업자” 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지식재산권기반 정책),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제1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16조(실태조사), 제1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20조(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제30조(과태료)에 규정되어 있음
- o “예술작품”은 제2조 제1호의 “예술산업”, 제3호의 “예술부가상품” 및 제7호의 “예술소비자” 정의,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제1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4조(청약철회),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예술부가상품”은 제2조 제1호의 “예술산업” 및 제7호의 “예술소비자” 정의,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4조(청약철회),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예술용역”은 제2조 제2호의 “예술작품” 및 제5호의 “예술가” 정의,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20조(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에 규정되어 있음
- “예술가”는 제2조 제2호의 “예술작품” 및 제4호의 “예술용역” 정의,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21조(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음
- “예술사업자”는 제2조 제5호의 “예술가” 및 제7호의 “예술소비자” 정의, 제6조(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21조(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22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4조(청약철회),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 제27조(분쟁조정)에 규정되어 있음
- “예술소비자”는 제1조(목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4조(청약철회),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 제27조(분쟁조정)에 규정되어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법률안에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VI. 유사입법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과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과일 등(이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예술인복지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o 소비자기본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o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o 예술산업의 정의

- [제1안] 예술작품의 복제산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예술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

“예술산업”이란 예술작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단, 예술작품을 복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은 제외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산업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산업(음악을 주된 요소로 하는 연극과 연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음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 예술산업의 범주를 확정하기 위해 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는 문제가 있음

- 복제산업을 제외시킬 것인가? : 예술작품 또는 예술부가상품의 정의에서 복제품을 포함시키는 이상 예술작품의 복제산업은 당연히 예술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복제산업은 일반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의미하는데 이미 콘텐츠산업으로 확립되어 있는 영역은 예술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통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예술작품의 복제유통산업으로 이미 확립된 산업분야는 영화, 출판, 방송(연예), 음악, 건축을 들 수 있음. 이를 예술산업에 포함시키는 경우 산업규모의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에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가 있으며, 건축시공도 포함

- 콘텐츠산업과 예술산업의 구별 문제 : 예술산업은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콘텐츠화하고 복제유통하는 구조이나 콘텐츠산업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복제유통하는 구조임. 콘텐츠산업은 기술용역을 통한 콘텐츠제작이 필수요소이나 예술산업은 예술작품의 제작에 투입되는 예술가의 예술용역이 필수요소임

- 콘텐츠산업을 예술산업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안은 입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음. 보다 간명하게 복제산업을 예술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 모색 필요하며 복제산업 이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예술산업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1안의 참고안] 예술산업에서 제외되는 복제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예술산업”이란 예술작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단, 예술작품을 복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제외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하는 방안은 제외범위를 간명하게 하는 입법기술이 있으나 제1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제2안]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예술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

“예술산업”이란 예술작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음악을 주된 요소로 하는 연극과 연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음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제외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영화 및 비디오물, 공연물(무용, 국악, 연극은 제외), 방송영상물(보도, 교양은 제외), 음악, 이미지제작물에 관한 산업이므로 이를 예술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제산업과 공연물을 제외하고는 그 범위가 일치함
-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는 경우 음악에서 대중/순수음악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음악제작물 제작과 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의 알선을 규정. 이 경우 순수음악 분야도 포함되어 예술산업에서 순수음악이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됨.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예를 대중예술로 보면(예술활동 증명세부기준 연예분야 참조) 순수음악은 연예에 해당하지 않은 음악으로 정의될 수 있음. 이를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배제하면 순수음악이 예술산업에 포함될 수 있음. 굳이 입법론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음악이 대중문화예술의 한정을 갖는 음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순수음악을 예술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반론 있음

-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 연예(演藝) 분야
-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예술산업의 범주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제외하는 경우 뮤지컬이 제외될 가능

성이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서 제작업의 대상이 연극, 국악, 무용 공연물을 제외한 공연물로 규정. 뮤지컬을 연극 공연물로 보면 예술산업이 될 수 있으나 연예음악 공연으로 보면 예술산업이 될 수 없음(예술산업 정의 제1안에서는 공연 전체가 예술산업에 포함되나 연예음악은 예술산업에서 제외되므로 연예음악 공연은 포함되는가의 해석문제 있음). 뮤지컬 에이전시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규제]의 적용대상인가, 예술산업법[규제free]의 적용대상인가의 문제 야기함. 현재 뮤지컬 에이전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고 있음. 입법적으로는 뮤지컬을 “음악을 주된 요소로 하는 연극”이라 하여 이를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배제하는 방안 있음. 다만 법해석으로 뮤지컬은 연극으로 보아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아니라 예술산업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보면 입법적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예술산업의 대상이 예술작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부가상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3안] 예술산업을 배제요소 없이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방안

“예술산업”이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예술작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예술산업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예술산업의 분야를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서 예술분야를 나누는 기준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한정함.

- 출판이 문학과 구별되는가? : 예술작품의 정의에서 복제품을 포함하므로 출판은 문학의 복제일 수 있음. 이를 다시 제외하여야 하는 문제 있음

- 방송영상물, 영화를 시각예술로 볼 경우 영화, 연예가 포함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과의 구별이 문제됨.

- 시각예술에서 건축이 포함되는가? : 포함되면 다시 배제해야 하는 문제.

- 공연예술에 대중음악공연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이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과의 구별이 문제됨

- 적극적 정의방안(예술산업 정의 제3안)이라 할지라도 대중문화예술과 건축, 출판을 배제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발생함. 따라서 적극적 정의라 하더라도 제외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 방안이 갖는 간명한 입법이라는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움

- 예술산업의 정의는 적극적 정의로 하고 예술작품의 정의에서 문학, 시각예술, 공

연예술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나 출판, 영화, 연예, 대중음악, 건축이 문화예술분야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있음

※ 최종안은 제2안을 기본으로 하되, 예술부가상품도 예술작품과 함께 예술산업의 핵심요소로 규정함

#### o 예술작품의 정의

- [제1안] 복제품을 포함하여 예술작품을 정의하는 방안

“예술작품”이란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창작물, 유·무형의 용품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와 이들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무형의 예술작품을 표현할 법적 용어 : 무형의 예술작품은 작곡, 문학, 대본 등으로 창작활동의 결과물이고 유형의 예술작품은 주로 시각예술의 창작의 결과물인데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창작물”로 표현. 공연예술에서 창작물 외에도 창작과 실연의 결과물인 “무형의 예술용역의 복합체”가 있음. 유형과 무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유·무형의”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복제품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콘텐츠 형태도 가능함을 명시하여 해석의 혼란을 제거할 필요

- [제2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외하고 예술작품을 정의하는 방안

“예술작품”이란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창작물, 유·무형의 용품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와 이들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음악을 주된 요소로 하는 연극형태의 공연물과 연예에 해당하지 않은 음악제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제외한다.

- 예술작품의 정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외를 명시하는 방안(예술산업 정의 제3안과 짝을 이룸. 예술산업 정의 제1안과 제2안에는 순수음악이 배제단서가 들어 있으므로 중복문제가 있어 결합할 수 없음) : 예술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산업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술작품의 정의에서도 제외단서를 규정. 이 경우에도 순수음악제작물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 포함

- [제3안] 예술작품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고 복제품을 제외하는 방안

“예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예술 소비생활에 제공하거나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개발된 유·무형의 창작물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를 말한다.

“예술부가상품”이란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공연·전시 과정에서 파생된 콘텐츠 등을 말한다.

- 예술작품이 산출될 수 있는 분야를 한정함. 문화예술 분야 중 예술활동증명대상이 아닌 출판과 어문을 제외, 대중문화예술분야인 연예와 영화 제외. 콘텐츠 분야로서 별도의 산업진흥법이 있는 만화 제외, 통상적인 예술과 거리가 있고 별도의 산업진흥법이 있는 건축을 제외하여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로 예술작품이 산출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함. 이 7개 분야는 예술산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도 함
- 별도의 예술부가상품 개념의 도입에 따라 복제품을 예술작품 정의에서 배제함. 예술부가상품은 예술작품의 복제품이나 예술작품에서 파생된 콘텐츠로 정의

※ 최종안은 제3안으로 결정함

#### o 예술용역의 정의

- [제1안] 문화예술 분야로 예술활동으로 정의하는 방안

“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창작, 실연, 실연의 지휘·연출·감독,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을 창작, 실연, 기술지원으로 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대중문화용역을 실연으로 규정. 저작권법은 실연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의 실연 이외에도 실연의 지휘, 연출 또는 감독을 포함.
- 영화산업과 방송사업을 제외하는 측면에서 감독과 촬영이라는 용어를 뺄 것인가의 문제. 음악감독은 포함필요. 공연 기술지원으로 한정할 것인가의 논의 필요
- 기술지원을 예술용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 예술인복지법에서는 기술지원이 예



술활동에 포함되나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의 기술적 또는 보조적 용역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실연을 말하므로 기술지원이 포함되지 않음. 스태프 중에서 보조용역은 기술지원이라 보기 어려움. 기술지원의 범주나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연, 촬영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 [제2안] 문화예술분야에 제외분야를 적시하여 정의하는 방안

“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건축, 어문, 출판은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창작, 실연, 실연의 지휘·연출·감독,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외할 장르 문제(예술용역 정의 제2안) : 건축, 어문, 출판. 이 중 어문과 출판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예술활동 증명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건축의 경우는 산업법주 때문에 제외. 예술산업 정의 제1안과 같이 제외조항이 있으면 굳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외할 필요 없으나 예술산업 정의 제2안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만 제외하거나 예술산업 정의 제3안의 적극적 정의의 경우는 이를 건축, 어문, 출판은 제외할 필요 있음

- [제3안] 예술산업의 적극적 정의를 바탕으로 예술용역을 정의하는 방안

“예술용역”이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창작, 실연, 실연의 지휘·연출·감독,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예술용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술분야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예술용역 정의 제3안) : 예술산업 정의 제1안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제로 한 조문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예술용역 정의 제3안과 결합할 수 없음. 건축, 어문, 출판의 배제문제가 여전히 있어 예술산업 정의 제2안 및 제3안과도 결합하기 어려움. 참고안으로서 의의

※ 최종안은 제1안을 기초로 하되, 문화예술분야는 예술작품 정의에서 구체적 분야를 적시함에 따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o 예술가의 정의

“예술가”란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 예술가는 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이라는 용어사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
- 예술인은 예술복지의 대상을 정하려는 목적 때문에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하나 대중문화예술인은 별도의 증명 필요하지 않음. 산업진흥법에서는 대상을 명시할 필요는 있으나 증명절차까지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태도에 따름. 예술인은 증명이 필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예술인복지법과의 구별필요. 따라서 헌법상의 용어인 예술가 사용
- 헌법상의 예술가의 의미도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단, 예술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아직 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위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른바, 연습생)도 포함시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와 같은 범주를 갖도록 함

#### o 예술사업자의 정의

- [제1안] 예술사업자를 세분하여 정의하는 방안

“예술사업자”란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외한다.

1. 예술기획업 : 예술작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예술작품 기획, 광고·협찬중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알선 및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2. 예술제작업 :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영업. 단,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작품의 제작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술유통업 : 예술작품을 유통하거나 유통을 매개하는 영업.

- 예술가와의 계약체결을 요건으로 해야 하는가? : 예술인복지법에서 사업자를 정의하면서 계약체결을 요건으로 한 것은 불공정행위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이 법은 사업자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므로 예술가와의 계약체결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음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제외하는 문제 : 대중문화예술산업과의 구별문제는 산업, 작품, 용역 정의에서 충분히 규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필요함

- 예술기획업의 정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알선 및 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의 훈련·지도·상담 업으로 규정. 이를 예술기획업의 모체로 하고, 제작유통기획을 포함. 광고 및 협찬 알선도 포함. 광고·협찬알선은 사회적 부작용이 있으므로 별개의 업종으로 하고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등록 등) 도입 가능성도 검토 필요. 현재 음성적이기 하나 자유업인데 양성화를 이유로 한 등록제는 진흥법체계에 부담이 됨.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가 광고·협찬중개를 하는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개수수료를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안(규제사항)도 검토할 수 있음. 투자중개는 자본시장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클라우드펀딩을 뜻하는 온라인투자중개업의 요건 검토 필요.
- 예술제작업에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곧 예술작품의 제작이 되는 경우는 제작업자라기 보다는 예술가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 범주에서 제외
- 예술유통업에서 티켓판매업을 유통매개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2안] 예술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안

“예술사업자”란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기획·제작·유통업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외한다.

- 예술사업자를 기획-제작-유통으로 세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예술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 법안에서 세분된 유형의 사업자를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분된 유형을 본문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간명한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자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 최종안에서는 제2안을 규정

#### o 예술소비자의 정의

“예술소비자”라 함은 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술작품을 예술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소비자가 예술작품을 소비하는 방식은 전시·공연을 보는 것은 향유, 콘텐츠는 이용, 유형의 용품은 사용으로 범주화 가능
- 예술소비생활이란? : 예술활동이란 예술가가 하는 것. 예술소비생활이란 예술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예술작품을 향유, 사용, 이용하는 생활. 중간제작을 배제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 “최종적으로”와 짝을 이룸
-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권의 작용방식은 창작, 참여, 향유로 규정. 창작은 예술가의 예술활동 또는 예술용역제공. 향유는 예술소비생활. 참여의 경우 주체가 불분명한

점이 있음. 참여가 창작이 아님은 분명함. 그러면 참여는 예술소비생활의 한 형태 인가가 문제됨. 문화활동 즉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있으나 이는 유상으로 구입하는 소비와는 별개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참여는 활동이지 소비가 아니라는 견해 있음. 하지만 예술활동 참여도 상품화하여 판매하면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술활동 체험도 예술산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예술소비에는 참여보다는 체험이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음. 체험과 참여가 반드시 동의어가 아닐 수 있어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 이용과 사용을 구별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 볼 수 있음

※ 최종안에서는 예술작품과 예술부가상품을 구분함에 따라 예술소비생활의 대상으로 예술작품과 함께 예술부가상품을 규정함

#### o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콘텐츠 향유 연령은 게임산업법, 영비법, 음악산업법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연령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만19세미만으로 규정. 이 법에서 예술용역 제공연령이 기준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연령과 동일해야 함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법과 동일하게 규정

※ 법안에서 청소년 예술가에 대한 규율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의조항에서 청소년 정의규정을 삭제함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작, 유통, 소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예술분야의 혁신을 통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술산업의 진흥이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통하여 예술산업 발전의 혜택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한다.

#### I. 조문의 취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술산업 진흥과 관련한 책무를 부여하고 예술산업 진흥의 방향을 제시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은 예술산업 진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생산, 유통, 소비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에서는 예술산업 진흥이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의 혁신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
- 제3항은 예술산업 진흥이 ‘예술’을 표준화, 획일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 제4항에서는 예술산업진흥법이 생산 및 유통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

#### III.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유사입법례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5.25.]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VI. 법안작업의 경과

- 1단계 : 법안 초기 작성단계에서는 타 법률의 규정을 검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규정하는 경우 내용은 대부분의 법률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 예술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까지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여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제외. 이런 맥락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다음과 같은 조항

으로 구상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술산업 진흥이 예술분야의 산업적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영역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술산업 발전의 혜택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o 2단계: 연구진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제3조가 목적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유사한 부분은 삭제하고 기존에 별도로 구상한 ‘기본방향’ 조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통합하도록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술산업 진흥과 관련한 역할 부여기로 결정. 특히, 예술소비자 부분을 포함하여 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2. 예술산업 진흥이 예술분야의 혁신을 자극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대하여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예술산업 발전의 혜택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한다.

- o 3단계(최종안): 자문회의 의견 및 최종 회의를 통하여 조문을 다듬되, 예술산업 진흥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내용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의 규정을 마련함

#### [4]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제4조(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술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부여하고, 타 기관의 장에게 협조할 의무를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제1항은 예술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케 하고 계획수립과 관련한 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함
- o 제2항에서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협조가 필요한 공공 및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협조할 의무를 규정함

#### III. 관련 조항

- o 법안 제4조(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들로 명시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V. 유사입법례

o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o 게임산업진흥법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o 스포츠산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

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o 음악산업진흥법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o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 VI. 법안작업의 경과

- 1단계 : 타 법률에 대한 검토 결과,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법률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첫 번째는 명칭으로 ‘중장기 기본계획’, ‘종합계획’, ‘기본계획’, ‘진흥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많이 사용. 두 번째는 기간으로 유형은 세 가지로 나타남. 첫 번째는 수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두 번째는 3년(콘텐츠산업진흥법), 세 번째는 5년임(인쇄문화진흥법, 공예산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수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세 번째는 종합계획, 기본계획의 내용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산업디자인법은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함. 이에 비해 대부분의 다른 법률은 상세하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각 항은 보통 다음의 내용과 같이 구성됨
  - 1항은 “00 장관은 00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00산업 종합(또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시작. 여기에 필요할 경우 “00기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또는 “00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등의 문구를 삽입
  - 2항은 세부적인 내용 기술
  - 기타 그 밖의 사항은 2항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 2항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 밖에 00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게임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공예산업진흥법, 유통발전법)
-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 2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00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게임산업법, 스포츠산업법, 공예법)
  - 법령,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음악법, 게임법, 공예법)
  - 00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영화법, 스포츠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

산업법, 인쇄문화산업법, 공예법)

- 게임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는 전문인력 언급 없음
- 00산업 분야 국제교류, 협력, 진출에 관한 사항(게임법, 영화법, 음악법, 인쇄법, 공예법)
- 00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스포츠법, 영화법, 산업디자인법)
-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공예법, 인쇄법, 영화법)
- 수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음악법, 게임법, 영화법)
-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음악법, 공예법, 영화법)
- 그 밖에 00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o 이러한 사례 검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조항을 구성

제4조(종합계획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예술산업진흥 종합계획(또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예술산업진흥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술산업진흥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예술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예술산업진흥과 관련한 법령,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예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예술산업분야의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예술산업분야의 유통에 관한 사항
  - 예술산업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예술산업분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2단계 : 연구진 논의 결과, 종합계획의 기간이 있어야 함이 검토되었으나 기간의 규정이 오히려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 시행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법 제4조 2항과 관련하여 ‘창업 및 제작지원’을 ‘창업 지원’으로 단순화하고, ‘예술소비자 보호’를 ‘예술소비자 권익증진’으로 적극적 개념으로 변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술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예술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산업진흥과 관련한 법령,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예술산업분야의 창업에 관한 사항
6. 예술산업분야의 유통에 관한 사항
7. 예술산업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예술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o 3단계(최종안) : 자문회의 결과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됨. 여타 법률들이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조항으로 세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 조항들 또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특히 초기 단계에서 각 조항들을 규정할 경우, 계획 수립 자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용을 간략히 하고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내용 변경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규정을 마련함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과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술산업에 있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예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이 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규정을 적용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 있는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법안 제21조(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에서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본다”고 규정함
- 법안 제24조(청약철회) 제2항에서 “예술소비자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과 관련하여 본 법의 우선적 효과를 확립함
- 예술산업 관련한 법제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함

#### VI. 유사입법례

- 「문화기본법」 제6조 제2항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해당사항 없음



## [6] 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등

**제6조(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예술사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창업을 지원하며 그에 있어 구체적 대상, 방법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예술산업의 저변을 확산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사업자의 창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에서는 예술산업 창업 지원에 있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 관련 창업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4항 제2호에서 진흥원의 사업으로 “예술산업 창업 및 투자지원”을 명시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예술창업을 지원함에 있어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안

**제2조(창업 지원)**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작품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2. 예술작품을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초를 이루는 창업에 관한 사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예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o 지원의 구체적 절차 방법의 제정을 통하여 예술산업의 창업에 대한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o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의 창업의 지원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o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 창업 및 제작 지원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예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예술산업 유통의 합리화에 대한 조문이 아

래와 같이 마련되었음

(예술산업 유통정보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에서 전자거래에 기반한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판매시점, 판매량, 판매금액 등의) 거래정보(회계/경영)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된 유통정보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유통업자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o 하지만 유통구조 개선은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고 산업의 흐름의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지원이 산업기반 조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소규모 예술사업자들의 시장참여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에 따라 창업지원 규정을 마련함

## [7]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현장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및 직무능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관련된 교육을 장려하도록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예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부터 실제 교육 관련 진행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에 따라 위임, 위탁이 가능함
- 제2항에서는 예술산업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산학협동과 현장교육을 장려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 제3항에서는 예술산업 전문인력의 기준 및 직무능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자격, 경력, 학력 및 교육이력 등 전문인력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제2호에서 “예술기획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4항 제3호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은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인재의 육성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할 수 있음
- 산학협동과 현장교육의 장려를 통하여 예술산업과 관련한 교육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문화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제1항의 경우 애초에는 지원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였으나 각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관련 지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원 주체에 포함시킴
-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처음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인력 양성에 업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전문인력의 기준과 능력만 설정하고 산학 협력과 현장 교육을 장려하도록 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규정을 마련함

## [8]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이하 “예술기획전문회사”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산업관련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2. 예술기획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3.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4.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5. 예술기획전문회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
7.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8. 예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 I. 조문의 취지

-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하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로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정책은 예술기획전문회사로 신고한 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예술기획전문회사는 법안 제17조제1항에서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기획, 광고·협찬 중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의 기획·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예술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한 영업을 하는 예술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독립한 사무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의무는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아님
-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정책의 내용은 “ 1. 예술산업관련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2. 예술기획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3.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4.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5. 예술

기획전문회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 7.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8. 예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업무는 제29조의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III. 관련 조항

- o 제17조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요건과 신고에 대해서 규정함
- o 제29조의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o 지원 정책을 통해 육성된 예술기획전문회사는 예술가와 예술작품 제작·유통을 연계하는 역할을 통하여 예술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o 예술기획전문회사의 발전은 예술산업의 영역확장에 기여하고 예술가의 수익 증대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o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과 교육을 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방안

**제22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기획업무 및 예술경영 연구 성과의 제공
  2. 예술기획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예술기획전문회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예술기획전문회사 박람회 지원
  5. 예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술기획전문회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에서 묶어서 규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원과 교육을 함께 규정함

-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조문의 내용구성은 문제없으나 조문배열의 순서상 예술산업 진흥정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정책 조항이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문제가 있음
-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지원정책과 교육규정을 다른 조문으로 분리하고 지원정책 규정을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함

## [9]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① 국가는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모태조합에 예술산업 계정을 운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국가에게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 국가에게 투자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국가가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투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제2항에서는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모태조합에 예술산업 계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모태조합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기업모태조합을 말함. 모태조합은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모태조합은 중소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예술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모태조합이 예술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모태조합에 예술산업 계정을 운용하면 예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모태조합이 투자할 수 있

으므로 예술산업에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는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가치평가는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문화상품의 기획안으로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는 실제 예술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예술작품에 대한 기획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치평가가 발전한다면, 더욱 쉽게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예술작품도 문화상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치평가기관으로 신청 후 지정받을 수 있으나 이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관련평가실적은 신생기관이 갖추기가 쉽지 않는 문제이며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출범과 함께 가치평가업무를 하기 어렵게 요소가 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예술작품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면 진흥원은 출범과 함께 가치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III. 관련 조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결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문화상품에 대한 가치평가기관 지정이 규정되어 있음
- 이 법안 제19조 제1항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에 따라 예술산업 발전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의 진흥과 함께 질 높은 예술작품의 제작을 기대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의 문화상품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국내창작예술작품 인정 방안 검토

제00조 (국내창작예술작품 인정) ① 국외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예술작품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예술작품의 예술적 특성이 국내창작예술작품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는 이를 국내창작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창작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정절차, 방법 및 국내창작 예술작품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은 국내창작예술작품으로 인정한 예술작품이 그 제작을 완료한 후에 제1항의 국내창작예술작품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내창작예술작품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예술창작품은 부가세 면세대상인데, 국내예술창작품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해외라이선스 뮤지컬의 경우 해외 라이선스사와 협업의 정도에 따라 국내창작품의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즉 해외라이선스 작품이라 해도 국내창작품에 버금갈 정도의 창작행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라이선스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국내창작예술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라 부가세 면세대상의 확대를 위해 국내창작 예술작품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외라이선스 뮤지컬도 국내 창작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게 하여 부가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됨
- 영비법의 국내영화인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창작예술작품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뮤지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연물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가세 면세범위의 확대하면 오히려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함

## [10] 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등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부가상품 관련 창업 및 홍보 지원
2. 예술부가상품 시장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3. 예술부가상품 전문 유통망 조성
4. 예술부가상품 개발 관련 저작권 상담 및 지원
5. 예술부가상품의 해외 유통 지원

### I. 조문의 취지

- 현대의 예술산업에 있어 한 축을 이루는 예술부가상품산업에 대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술부가상품의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예술부가상품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 당해 시책에는 예술부가상품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상품의 유통을 위한 홍보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 진흥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정책, 유통에 있어 국내 유통망 조성 및 해외 유통 지원을 위한 정책, 그리고 부가상품 개발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 상담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2조(정의)에서 예술부가상품을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공연·전시 과정에서 파생된 콘텐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함
- 법안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4항 제6호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은 “예술부가상품시장 활성화 지원”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함
- 법안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의 유통·거래에서 예술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안 제24조(청약철회) 제3항 제3호에서 예술소비자는 “복제가 가능한 예술부가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안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1항에서 “예술사업자는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부당하게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법안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예술사업자는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예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관련 파생콘텐츠와 관련된 제반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의 예술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 저작권 상담을 통하여 부가상품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 유통활성화



제12조(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유통활성화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처음에는 공연 콘텐츠의 2차적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작품의 복제물 및 파생물의 유통에 있어 심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1차적 제공의 단계에서 이미 심의 받은 예술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고려함

(외국공연물 등 심의특례) ① 국내에서 공연, 전시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 전시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산업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국내에서 공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후 모든 예술작품과 관련하여 부가상품들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유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술부가상품의 정의 규정과 함께 이의 유통 활성화 방안을 규정으로 마련함

(예술부가상품의 정의)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공연·전시 과정에서 파생된 콘텐츠 등을 말한다”

(예술부가상품 유통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1. 예술부가상품 관련 창업 지원
  2. 예술부가상품 시장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3. 예술부가상품에 대한 등급분류의 간소화
- o 예술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유통의 활성화를 넘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반적 진흥책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연구진 내외에서 공통됨에 따라 예술부가상품에 있어서도 그 제적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시책마련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게 됨
- 등급분류의 간소화보다 국내외 유통망 조성이 예술부가상품 시장 진흥에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하고 부가상품업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규정함

## [11] 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11조(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용품(예술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나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품질향상과 재료 및 처리기법 등 예술용품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용품의 상품성과 유통 능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술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예술용품을 구매할 경우 전항의 표준규격에 맞는 예술용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예술소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술용품의 제작·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활동을 보조하는 예술용품의 연구개발, 품질향상, 기술개발, 제작 및 보급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제1항에서 예술용품을 “예술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나 기기”로 정의하고 이의 연구개발, 품질향상과 재료 및 처리기법 등 예술용품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o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용품 시장 내에서 상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유통 능력을 높이며 상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술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규격의 마련은 예술용품 제작업자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예술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시장 진흥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o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표준규격에 맞는 예술용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의 표준규격을 갖춘 예술용품의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용품에 대한 대량 소비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하여 예술용품 구매 시 표준규격에 맞는 예술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함
- o 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예술 소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술용품의 제작·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체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예술소비활동에 있어 장애를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맞춤형 예술품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함

### III. 관련 조항

- o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4항 제7호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은 “예술용품 품질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용품에 관한 연구개발,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예술산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예술산업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음
- o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용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민의 보편적 문화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o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의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

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 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애초에는 예술상품 전반에 있어 우수한 상품들에 대한 국가의 인증제를 마련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은 상품들에는 인증 표시를 허용하고 그의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 이후 예술상품 중 예술용품에 한하여 우수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고려에서 다음의 규정이 마련됨

(우수예술용품 인증제)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용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예술관련활동에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예술용품을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예술용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예술용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예술용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예술용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우수예술용품의 인증 기준·절차,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예술용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전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인증제 자체가 갖는 규제적 성격과 시장에 가져올 부작용 등에 대한 지적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인증제를 삭제하고 대신하여 예술용품 제작과 소비자 자체의 진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국가의 지원 사항을 마련함

－ 우수예술용품에 대한 인증제를 대신하여 예술용품 일반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이를 갖춘 경우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의한 구매과정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표준규격의 규제적 성격을 최소화하고 제작자 지원을 도모함

－ 특히 예술소비활동에서 배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들의 예술소비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예술용품 제작, 개발,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문화관광연구원과의 회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술용품이 산업의 규모상 예술산업진흥법내 개념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음

## [1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작 및 유통에 있어 국제적 협력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산업 전반에 있어 국제교류가 가능하고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의무를 명시함
- 제2항에서 전항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안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의 해외 유통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4항 제8호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은 “예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o 시행령안

**제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한국예술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사업
3. 국내외 예술산업 관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예술사업자들이 국내 영세한 예술산업 시장을 넘어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함
- o 예술산업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의 예술산업의 홍보와 더불어 선진 산업 기술의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예술산업 자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VI. 유사입법례**

- o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o 해당사항 없음

## [13] 지식재산권기반 정책

**제13조(지식재산권기반 정책)** 국가는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예술산업 진흥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의 진흥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기반 예술산업 진흥정책 강구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통하여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창작 및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규정함
  - －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정부는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는 이념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본 규정이 마련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제8호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안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 개발 관련 저작권 상담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정책마련을 통하여 예술산업 관련하여 취약한 권리 보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권리보장적 정책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o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제7항의 유통활성화

제12조(유통활성화) ⑦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문화상품의 정품(正品)의 소비 장려,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해당사항 없음

## [14]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등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예술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구매 및 판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이나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3조)이 공동구매나 공동판매의 사업을 영유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경영 지원)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동구매, 공동판매에 대한 지원 조항은 부재하여 본 항의 규정이 마련됨
-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작품 및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예술산업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이라는 특수한 창작물, 용역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우선 구매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11조(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예술용품을 구매할 경우 전항의 표준규격에 맞는 예술용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 관련 사회적 기업이 극히 적은 현 상황에서 관련된 협동조합 등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예술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예술작품, 예술부가상품에 대한 국가의 우선구매를 통해 예술산업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 VI. 유사입법례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2항의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제4항의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애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이 예술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가의 창작, 실연 및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 그의 경영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형태의 예술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예술작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술가의 창작·실연 등을 진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경우 경영·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예술산업 관련 서비스가 지나치게 나열적이고,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조건이 본 법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법에서 적용받는 재정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경영 및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형태의 예술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예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영·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특히 예술관련 사회적기업이 드물고 예술관련 협동조합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유통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규정을 마련함

## [15]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1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매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자
2. 공연 및 전시 티켓판매대행사
3. 공연 및 전시 기획·제작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작품 유통관련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자료의 세부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되,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통합전산망의 운영, 자료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산업에 있어 사업자간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들에게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의무지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제1항에서는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의 목적을 예술산업 활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 밝히고 그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규정함
- o 제2항에서는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자의 범주를 공연 및 전시 티켓판매대행사, 공연 및 전시 기획·제작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작품 유통관련 사업자로 열거하고 이들 중 일정한 매출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이 가입 의무자가 됨을

규정함

- 법 제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서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o 제3항에서는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자가 전산망에 전송할 자료를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열거함
- o 제4항에서는 통합전산망에 집계된 자료의 인터넷 공개의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부여하며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함
- o 제5항에서는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o 제6항에서는 통합전산망의 운영, 자료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III. 관련 조항

- o 법안 제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서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매출규모, 통합전산망의 운영,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o 시행령안

**제4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연 매출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자는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진흥원은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진흥원은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자료)**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 및 전시장 명칭
2. 공연 및 전시 제목
3. 공연 및 전시 기간
4. 공연의 등급
5. 공연 및 전시 제작자의 국적
6. 공연 및 전시 관람요금
7. 입장권 판매액(공연 및 전시별, 날짜별 구분)
8. 입장객 수
9. 그 밖에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자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자료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영업비밀 공개금지를 통해 예술사업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규정과 관련 하위법령 규정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함

- 제1항과 관련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목적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하였다가 “예술산업시장의 활성화와 사업자간 공정한 분배”로 변경하였지만, 시장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의 주된 목적이 투명성을 통한 거래질서 확보에 있다는 검토에 따라 현재의 규정처럼 “예술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확정함
- 제2항과 관련하여 애초에는 가입 의무자의 범주만 지정하였으나 매출규모 요건을 삽입함
- 제3항과 관련하여 공연장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는데 있어 고의적인 누락과 조작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기본정보의 전송 의무만을 남겨둠
- 제5항과 관련하여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주된 업무로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두었으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치가 법문화됨에 따라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6] 실태조사 등

**제1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예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예술광고 및 협찬 중개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있어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실태조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 시기, 대상,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제1항에서 예술산업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의 의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함
- o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예술광고 및 협찬 중개의 수수료율에 대한 조사와 공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예술산업 관련하여 광고 및 협찬 중개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질서의 안정화를 위한 감독·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광고 및 협찬 중개의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o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본 법의 제4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에 있어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과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 제3항은 결국 다음과 같이 읽혀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술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항에서는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안 제4조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술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정책수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안

<p><b>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등)</b>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산업의 시장 현황</li> <li>2. 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li> <li>3. 예술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li> <li>4. 예술산업의 해외시장 동향</li> <li>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예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예술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 V. 입법기대효과

-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술산업 관련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술광고 및 협찬 중개의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공표함으로써 관련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조 (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뒤에 바로 이어지는 조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제4조가 총칙 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구체적인 각칙 규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예술광고 및 협찬 중개의 수수료율에 대한 조사·공표가 실태조사 조항에 포섭되었음
- 예술산업의 유통에 있어 특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고 및 협찬중개업을 신고제를 통하여 제도 내적으로 포섭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현

재의 업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신고제와 수수료율 및 회계사항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광고 중개업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광고 및 중개업의 합리화) ①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광고 및 협찬 중개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수수료율과 회계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하지만 광고 및 협찬중개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 목적으로 신고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저항이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며 간접적인 감독, 감시책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업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을 마련함

(예술광고중개에 대한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광고 및 협찬의 중개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실태조사의 대상을 광고 및 협찬중개업의 수수료율로 구체화하고 이를 본래의 실태조사 조항에 삽입시켜 현재의 규정을 마련함

## [17]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①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기획, 광고·협찬 중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의 기획·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예술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 있는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신고증의 발급, 폐업 및 직권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산업 진흥의 핵심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제1호에서는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함
  -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음. 첫째, 예술기획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예술사업자이어야 함. 예술기획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영업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기획, 광고·협찬 중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의 기획·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영업”으로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예술기획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영업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①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기획. 이 영업은 예술작품이나 예술부가상품을 효과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하는营业을 말함. 제작기획의 경우 제작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②광고·협찬 중개는 예술작품에 붙는 광고나 기업협찬을 중개하는 것을 말함. 광고·협찬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예술산업의 관행임. ③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의 기획·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사업자가 아니므로 예술기획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없으나 예술산업 영역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을 기획, 알선, 관

- 리하는 것은 예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할 수 있음. 이 세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예술기획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음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요건 중 두 번째는 예술사업자가 제8조에서 정한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임. 만일 예술사업자가 제8조의 지원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제1항이 법조문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가 신고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님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요건 중 세 번째로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야 함. 독립한 사무소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무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시행규칙에서 독립한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정하고, 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임대차 계약서는 독립한 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만일 임차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사무소라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o 제2항에서는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에 따른 법적 인센티브를 규정함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의 기본적 인센티브는 제8조의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임. 이외에도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고, 예술기획전문회사 교육을 받은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면 1년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을 인정함
- 예술기획전문회사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산업 간의 영역구분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별개의 종사경력이 발생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4년의 종사경력을 요구하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는 종사경력을 신고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가와 전속계약을 하면 얼마든지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예술사업자는 예술가와 전속계약을 한다고 해도 두 영역이 상이하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없이 대중문화예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음. 양 업종의 형평을 위해서도 예술기획전문회사 종사경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으로 호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인 4년의 종사경력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실제 종사하지 아니하고 예술기획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매년 교육을 받고 영업활동을 했다는 전제에서 4년이 경과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기능을 할 수 있음. 예술기획전문회사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예술산업에서 출발하여 더 경쟁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사업화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산업으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인 4년의 종사경력은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으로 간주되는 4년의 영업활동이 경과하여 등록요건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겸하거나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단계별로 해 나갈 수 있음

- 제3항에서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신고증의 발급, 폐업 및 직권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

### III. 관련 조항

- 제8조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함
- 제18조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29조의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접수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제17조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 제17조제2항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신고증의 발급, 폐업 및 직권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

- 시행령안

**제7조(영업활동 증빙서류)**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란 “법 제17조제1항이 정하는 영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o 시행규칙안

**제2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서에 독립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기획전문회사의 명칭
2. 예술기획전문회사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예술기획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예술기획전문회사를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술기획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은 본 보고서 V.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참조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예술기획전문회사 육성 정책의 행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o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경력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중문화예술 영역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용이하게 하여 예술산업의 발전에 기여

## VI. 유사입법예

- o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o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제00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① 예술기획업자가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년 이상의 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9조제2항에 따른 예술산업 전문인력에 해당하거나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한 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술기획업자가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함. 이 경우 예술기획업자와 예술기획전문회사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명칭을 달리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동일한 사항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안작성의 원칙이라 할 때, 적어도 예술기획전문회사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됨
- 예술사업자의 정의에서 예술기획업 정의를 삭제함에 따라 법안에서 예술기획업자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예술기획전문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는 예술사업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사업자 중에서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할 수 있게 함
- 조문형식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록 제재규정이 없다고 해도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신고의 목적을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라 규정하여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요건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해 2년 이상의 종사경력 또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됨. 이 경우 예술기획 전문인력의 양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규제사항이 아닌 신고요건을 위반시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강력한 규제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출 예술기획업자가 소수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육성이라는 정책관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고요건을 최소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

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o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제00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예술기획전문회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도는 신고제도의 적실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신고제도와 함께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가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법률에서는 이를 위한 위임근거 규정만 남기도록 함

## [18]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제1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진흥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교육 실시와 이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기획전문회사 육성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교육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교육대상은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한 자임
  -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임의교육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예술기획전문회사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제17조제2항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가 교육을 받는 경우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 있으면 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1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임. 요약하면 예술산업진흥법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교육실시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나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경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III. 관련 조항

- 제17조제2항에서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 있는 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1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중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교육은 예술기획전문회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기여하여 예술산업의 인적 기반이 공고히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VI. 유사입법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업자 교육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과 교육을 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방안

**제22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기획업무 및 예술경영 연구 성과의 제공
2. 예술기획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예술기획전문회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예술기획전문회사 박람회 지원
5. 예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예술기획전문회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에서 묶어서 규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원과 교육을 함께 규정함
-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조문의 내용구성은 문제없으나 조문배열의 순서상 예술산업 진흥정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지원정책 조항이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문제가 있음
- 교육도 넓은 의미에서 지원 정책이라 볼 수도 있으나 제17조제2항의 예술기획전문회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인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다음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지원정책과 교육규정을 다른 조문으로 분리하고 지원정책 규정을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함



## [19]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예술산업 창업 및 투자지원
3.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4. 예술기획전문회사 육성·지원
5. 예술산업 유통·전시·홍보 지원
6. 예술부가상품시장 활성화 지원
7. 예술용품 품질개발 및 기술개발
8. 예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9.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증진
10.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11.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⑤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설립하고 이의 사업범위, 경비지원 등 운영에 대해서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 예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하도록 함
  -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은 예술산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제2항에서는 진흥원을 법인으로 한다고 하며 별도의 법인격을 갖도록 함.
  - 진흥원은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와 별도로 계약주체가 됨은 물론이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
  - 진흥원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준하여 설립하며 법인등기를 필요로 함
- 제3항에서는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고 하여 임직원을 설치근거를 정관에 따르도록 한 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
  - 진흥원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단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조). 따라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임직원에 관한 정관변경이 효력이 있음
- 제4항에서 진흥원을 사업을 정하고 있는 바, “1. 예술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예술산업 창업 및 투자지원, 3.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4. 예술기획전문회사 육성·지원, 5. 예술산업 유통·전시·홍보 지원, 6. 예술부가상품시장 활성화 지원, 7. 예술용품 품질개발 및 기술개발, 8. 예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9.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증진, 10.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11.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진흥원 사업 조항은 예술산업진흥법(안) 제6조(예술산업의 창업지원),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육성지원),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제11조(예술용품 품질개발 및 기술개발 등),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활성화),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에 기초하고 있음
- 제5항은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진흥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제6항에서는 진흥원에 적용되는 법률을 이 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보충적으로 민법을 규정함
  - 진흥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이 법인 예술산업진흥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고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진흥원에 대하여 예술산업진흥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준용됨. 즉 예술산업진흥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민법의 규정은 예술산업진흥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준용될 수 있음. 진흥원에 준용되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에 대한 일반규정과 재단법인의 특유한 규정임

- 제7항에서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규제하고자 함
- 예술산업진흥법(안)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안 제1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안 제1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교육실시를 진흥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법안 제27조(분쟁조정)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조 제2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는 진흥원에서 진행되는 분쟁조정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함
- 법안 제30조(과태료) 제2항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부칙 제2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사업진흥원으로 보도록 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이 법 시행일에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한국예술산업진흥업의 설립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 정책의 집행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예술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VI. 유사입법례

-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담기관 지정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산업진흥기관 간의 경쟁과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진흥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지정안의 검토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음
- 예술산업 진흥이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술산업진흥기관 간의 경쟁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담기관 지정행위로 진흥기관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법률에 진흥원의 설립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예술산업 진흥 사업 수행의 책임과 권한을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법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예술산업진흥기관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전담기관 지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예술산업진흥원 설립방안을 최종안으로 규정함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예술용품의 보급
5.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제20조(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산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선언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성실한 계약이행의무라고 하는 계약체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 선언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 부처는 예술산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을 위한 각종 법제도 및 정책을 설계 및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됨
  - 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산업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함
  - 기본적으로 예술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예술산업의 특수성이나 예술산업 참여자들의 역학관계로 시장원리에만 맡기는 것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 당국의 적절한 규제체제가 작동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선언한 것임
- 제2항에서는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공정한 계약체결의무 및 성실한 계약이행의무를 부과함
  - 일반조항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에서 지켜야 할 계약체결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임
  -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예술사업자와 예술가가 될 것임

- 먼저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체결과정에서 대등한 입자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히 예술사업자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는 제21조에서,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는 제22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제20조 제2항은 원칙적 규정으로 기능함
- 또한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에게 이른바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원칙은 민법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모든 민사거래에서의 기본원칙임. 따라서 예술용역관련 계약의 기본법이 될 이 법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규정한 것임
-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되지 못하거나,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비록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 규정에 근거해서 당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또한 계약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III. 관련 조항

- o 제20조는 법안 중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에서 일종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임
- o 따라서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의 내용에서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20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각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음
- o 제21조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o 제22조에서는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산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을 위한 각종 국가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 o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VI. 유사입법례

- o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o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o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 국가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노력 의무 입법화 방안

- 처음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화하였음

**제00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사업자와 예술작품 또는 예술용역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사업자와 예술작품 또는 예술용역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하지만 제20조가 총칙적 성격의 규정이어서,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서의 예술가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예술사업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영업질서’라는 용어보다 ‘거래질서’라는 용어가 예술산업에 적절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만 원용하여 최종안으로 규정함

-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의 공정한 계약체결의무 및 성실한 계약이행의무 입법화 방안
  - 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조문들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문화하였음

**제00조(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00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하지만 제20조가 총칙적 성격의 규정이어서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서의 예술가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예술사업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표준계약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 유사입법례의 중복적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을 ‘예술산업 종사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및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제1항만 원용하여 최종안으로 규정함

## [21]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21조(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본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서의 예술가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규정임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개념상 법안의 예술가와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은 다름
  - 법안의 예술가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법안 제2조 제5호)을 의미하고,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제2조 제2호)을 의미함
  -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으로 증명된 사람만을 의미함(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즉 증명 절차(예컨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의 결정)를 통해서 예술인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 포섭되는 것임
  - 따라서 법안의 예술가의 개념범위가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의 개념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술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법안의 예술가를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술가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가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의제방식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를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인'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결국 의제방식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를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인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임

### III. 관련 조항

- o 제2조 제5호는 예술가를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o 제27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신인 예술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o 예술산업 분야의 주요 구성원인 예술가에 대한 보호 확대를 통하여 예술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

### VI. 유사입법례

- o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입법화 방안

-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입법화 방안으로는 처음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였음

#### <제1안>

**제0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예술작품 또는 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은 예술가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가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2. 예술가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예술가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가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행위로서 예술가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

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를 원용하여 만든 조문안임.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공정행위의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보고·자료제출·출석요구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시정조치 등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음. 다만 제1항 제5호에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행위로서 예술가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였음.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이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별표 1]의 내용에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행위로서 예술가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2안>

**제0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작품 또는 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 등과 관련한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간주된다.

- 제2안은 의제방식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를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증명절차(예컨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의 결정)를 통해서 예술인으로 결정된 사람만이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에 포섭되는 것임. 즉 법안의 예술가는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보다는 넓은 개념임. 결국 의제방식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를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인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임

<제3안>

**제0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작품 또는 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 등과 관련한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제3안은 준용방식을 통해서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를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기본적인 취지는 제2안과 동일함
- o 결국 준용방식보다는 의제방식이 예술가의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 입법경제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를 직접적으로 원용하는 것보다는 의제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으로 규정함



## [22]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제22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① 예술사업자는 다른 예술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예술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예술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예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임.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절차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현재의 예술산업계에서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로 문제되고 있는 행위유형들을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로 규정하였는바,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다른 예술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다섯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1호는 ‘거래거절’의 세부유형으로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하고 있고, [별표 1의2] 제2호는 '차별적 취급'의 세부유형으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로 구분하고 있음

- 제2호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예술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하지만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또는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단,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안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일부유형을 원용하되,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우월적인 지위'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적용범위를 넓혔음
- 제3호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7호는 이러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소위 '배타조건부거래'(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3호는 바로 예술산업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공연유통분야(공연티켓판매대행) 시장에서 공연제작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자 하나, 일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계약을 강제하거나 수익금 선지급 등을 통해 독점을 유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제4호는 다른 예술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는 통상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 할 수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통상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행위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가장 핵심적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sup>2)</sup>
- 제5호는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예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임. 여기서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개념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원용한 것임
- o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예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절차임
  - 둘째, 조사결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절차임
-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적용 방지를 위하여 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고,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절차를 규정하였음

### III. 관련 조항

- o 제27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이호영, 「독점규제법」, 제5판, 홍문사, 2015, 191면.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 또는 규제함으로써 예술산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
-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이외에 별도로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 또는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확보

#### VI. 유사입법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권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o 「방송법」 제85조의2 금지행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o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

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입법화 방안

-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입법화 방안으로는 다음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였음

**제00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예술작품 또는 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 등과 관련한 예술사업자는 다른 예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다른 예술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예술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사

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예술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예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조문안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 제1호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제3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제5호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을 원용한 것임.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처럼 공정거래법상의 유형을 활용하여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임. 제2항은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3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을 원용한 것임. 제3항 내지 제5항은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을 원용한 것임

－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먼저 위 조문안 제1항 제2호(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는 예술사업자 상호 간의 민사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예술인복지법의 경우,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의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대상·내용으로 입법화되었음. 하지만 위 조문안의 경우 온전히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서 다시 제3항에서 자체적인 제재수단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순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따라서 제2항에서 예술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참고로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이외에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을 전제로 하는 재정지원 중단 조치도 논의된 적이 있음. 하지만 재정지원 중단조치의 경우 입법과정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음

- 결국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하는 구조규제 방식보다는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행위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현재의 예술산업계에서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로 문제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을 법안 자체의 입법취지에 맞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할중복의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일정한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적용 문제로 인하여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법안에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으로 규정함

## [23] 예술소비자 보호시책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유통·거래에서 예술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술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6조에 따른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조사
  3. 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예술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예술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밖에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해서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유통·거래에서 예술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의 추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해서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유통·거래에서 예술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여섯 가지의 사업의 추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1호는 예술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사업임
  - 제2호는 제26조에 따른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조사사업임
  - 제3호는 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사업임
  - 제4호는 예술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임
  - 제5호는 예술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사업임
  - 제6호는 그밖에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사업임
-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안 제19조에 의해 설립되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포함될 수 있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III. 관련 조항

- 제2조 제7호에서는 예술소비자를 “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예술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제26조에서는 예술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9조에서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 분야의 주요 구성원인 예술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예술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
- 직접적인 규제나 제재방식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해서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도 종합적인 예술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가능

### VI. 유사입법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의 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정부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o 해당사항 없음

## [24] 청약철회

**제24조(청약철회)** ①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입장 전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을 하였더라도 공연 및 전시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예술소비자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예술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1. 예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예술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예술작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술소비자의 관람, 일부 소비로 미술작품 유통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가능한 예술부가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예술사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포장에 표시하여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⑤ 청약철회의 대상, 기간, 환불기준, 환불수수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라든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임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구매와 관련된 환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무형물인 공연 및 전시의 관람 입장권의 경우에는 예매후 공연 전 환불 문제 및 공연 및 전시 관람 중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환불 문제가 존재함.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제1항임
  - 유형물인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구매후 환불 문제가 존재함.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제2항임

- 제1항에서는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입장 전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을 하였더라도 공연 및 전시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칙적으로 예술소비자는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한 입장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예술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 및 전시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제2항에서는 예술소비자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술소비자가 소위 ‘고가 미술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의 기간을 늘림으로써 미술작품 예술소비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14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7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7일로 설정하고 있음
  - 예술소비자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의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는 장기인 30일로 설정함으로써 예술소비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
- 제3항에서는 예술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네 가지로 명문화하였음
  - 제1호는 예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예술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임. 단, 예술작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 제2호는 예술소비자의 관람, 일부 소비로 미술작품 유통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임
  - 제3호는 복제가 가능한 예술부가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임. 복제가 가능한

예술부가상품이란 ‘예술작품을 촬영하여 디지털화시킨 예술부가상품(예, DVD 등)’을 의미함

- 제4호는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임

○ 제4항에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예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포장에 표시하여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의무를 부과하였음. 단, 예술사업자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 제5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약철회의 대상, 기간, 환불기준, 환불수수료 등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음

### III. 관련 조항

○ 제2조 제7호에서는 예술소비자를 “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예술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제27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제24조 제1항 단서는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을 하였더라도 청약철회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로, ‘공연 및 전시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제24조 제2항은 예술소비자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미술작품의 가액기준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예외에 관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가액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예술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의 하나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

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안

**제8조(청약철회)** 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연급 배우가 사전 고지 없이 교체된 경우
2. 공연 및 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된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액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위 시행령안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로 ‘주연급 배우가 사전 고지 없이 교체된 경우’와 ‘공연 및 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된 경우’ 두 가지를 규정하였음

- 위 시행령안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란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음. 현재의 미술작품 시장에서의 평균가격, 미술작품 구매 저변 확대의 필요성, 우리나라 일반 대중의 소득수준, 해외사례 중 저가의 에디션 및 프린트 환불 규정은 까다롭지 않으나 100만원 이상 상대적 높은 가격의 작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가 미술품의 기준으로 100만을 상정한 것임.

- 위 시행령안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매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액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두 가지를 규정하였음. 참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액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원용한 것임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작품의 구매와 관련된 환불이 문제가 되는 경우 청약철회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소비자 보호의 미비점 보완
- o 무형물인 공연 및 전시의 관람 입장권의 경우와 유형물인 미술작품의 경우를 구분해서 규율함으로써, 예술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 VI. 유사입법례

- o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의 청약철회 등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약의 철회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 입법화 방안

-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 입법화 방안으로 처음에는 다음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였음

제00조(청약철회 등) 예술사업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예술상품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품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위 조문안과 관련하여 포괄적 예외방식 보다는 예술산업에 특유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특수조항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14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7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7일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술품의 경우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30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방문판매, 할부판매, 전자거래, 일반거래 등 구매 형태에 따른 청약철회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공연전시는 용역판매로, 미술품은 재화판매로 구분하여 유형별 청약철회의 대상, 기간, 환불기준, 환불수수료 청약철회 수수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반면에 청약철회의 대상, 기간은 고정적이므로 대통령령으로, 환불기준은 케이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계약의 중요 내용과 다른 경우’로는 예컨대 주연급 배우가 사전 고지 없이 교체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o 결국 위와 같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현재의 법안 제24조를 최종안으로 규정함

## [25] 예술소비자의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① 예술사업자는 예술작품 또는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부당하게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예술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을 거절하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서 또는 약관 상의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o 예술사업자와 예술소비자 간의 예술작품 또는 예술부가상품 거래에 있어서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는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 및 그 효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II. 조문의 내용설명

- o 제1항에서는 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예술작품 또는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부당하게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o 제2항에서는 예술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을 거절하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음
  -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음

- 법안 제25조 제2항에서는 ‘예술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을 거절하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의 배제’를 전제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우보다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충실함
- 특히 이 조항은 미술시장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의미한 규정이 될 수 있음. 예컨대 미술품이 위작으로 밝혀지거나 미술품의 매매 및 교환시 제공된 정보에 허위나 오류가 있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미술품 경매회사의 책임 배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임. 뉴욕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입법례는 위작으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보증 거절도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o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서 또는 약관 상의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III. 관련 조항

- o 제27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o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o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o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이나 약관 금지를 통하여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 o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이나 약관의 효력 부인을 통하여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의 실효성 확보

## VI. 유사입법례

###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책조항의 금지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해당사항 없음

## [26] 예술소비자보호지침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예술사업자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예술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예술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에 관한 약관의 건본을 마련하여 예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규제사항, 약관의 건본 사용 권고, 약관 관련 규제사항 위반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으나, 예술산업계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이러한 지침의 형태로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예술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임
- 제2항에서는 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계약의 해제·

해지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환불,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약관의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예술사업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예술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예술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이므로, 예술사업자의 약관이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예술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당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예술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예술소비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
- 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예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약관의 견본’이라는 표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이 규율하고 있는 ‘표준약관’이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 채택한 개념임
- 제5항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표시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III. 관련 조항

-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진해야 하는 예술소비자 보호 시책 사업 중의 하나로 ‘제26조에 따른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조사’가 규정되어 있음
- 제27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9조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제26조 제2항은 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계약의 해지·해지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약관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 시행령안

**제9조(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예술사업자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결함 등에 따른 예술소비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위 시행령안에서는 예술사업자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 세부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는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 세부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1.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 시행령안은 이것을 원용한 것임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산업 분야에서의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하여 예술소비자 보호의 미비점 보완 및 실효성 확보

## VI. 유사입법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의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해당사항 없음

## [27] 분쟁조정

**제27조(분쟁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는 진흥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예술소비자단체·예술사업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진흥원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에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게 될 분쟁조정업무의 대상은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함
- 제2항에서는 분쟁당사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3항에서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기본법」 제66조의 분쟁조정의 기간을 원용하였음
- 제4항에서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예술소비자단체·예술사업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4항을 원용하였음
- 제5항에서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1항을 원용하였음
- 제6항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음
-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과 같이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법안 제27조 제6항에서는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조정, 예술사업자와 예술소비자 간의 분쟁조정에 있어서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재판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효력과 동일한 기판력이 부여되는 것임.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효력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재판상 화해’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민법상 화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함
- 제7항에서는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에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 시정조치 및 시정 권고를 면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제4항을 원용

한 것임

### III. 관련 조항

- 제19조에서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21조에서는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제22조에서는 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제24조에서는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25조에서는 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26조에서는 예술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를 통한 분쟁해결보다 시간, 비용 등에서의 경감 가능

### VI. 유사입법례

- 「소비자기본법」 제65조의 분쟁조정

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o 「소비자기본법」 제66조의 분쟁조정의 기간

-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소비자기본법」 제67조의 분쟁조정의 효력 등

-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의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등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o 분쟁조정에 관한 입법화 방안

- 분쟁조정에 관한 입법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조정과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분리하여 조문화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였음

<1안>

**제00조(분쟁조정)** ① 제00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0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00조 제0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위 조문안 1의 기본취지는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쟁조정기구를 별도로 두지만, 위 조문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분쟁조정 주체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분쟁조정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2안>

**제00조(분쟁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00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 당사자는 제1항의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관이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관은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기관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위 조문안 2의 기본취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닌 법안 상의 전담기관을 분쟁조정주체로 설정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분쟁조정내용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임. 특히 분쟁조정내용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조정성립률이 낮아지는 문제로 인하여, 조정인들이 부담스러워하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최근에는 민법상 화해 계약으로 많이 적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민법상 화해로 한 것임. 한편 소비 관련 분쟁조정업무까지 전담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실제 분쟁발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소비자보호원과의 충돌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분쟁조정보다는 권익보호 정도로 완화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안>

**제00조(예술사업자 간 분쟁조정)** ① 제00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00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0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위 조문안 1의 기본취지는 예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쟁조정기구를 별도로 두지만, 입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분쟁조정 주체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분쟁조정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즉 예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전 단계로서 사업자 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2안>

**제00조(예술사업자 간 분쟁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00조 제0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00조 제0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있어 제00조 제0항에서부터 제0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00조 제0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조문안 2의 기본취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법안 상의 전담기관을 분쟁조정주체로 설정하고,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조문안 2와 연동하여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는 예술사업자와 예술소비자 간의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분쟁조정내용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분쟁조정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전담기관 지정제도가 아닌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하기로 한 점, 기타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케이스의 규모, 내용 및 절차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두 조문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법안 제27조를 최종안으로 규정함

## [28] 수수료

**제28조(수수료)**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I. 조문의 취지

-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신고와 변경신고의 각 수수료 금액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 수수료는 국가·공공단체 등이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함.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공적 사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제1항에서 “예술작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기획, 광고·협찬 중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의 기획·알선 및 훈련·지도·상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예술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신고증의 발급, 폐업 및 직권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는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 시행규칙안

**제4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제28조 관련)

구 분	금 액
1.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25,000원
2. 예술기획전문회사 변경신고	15,000원

#### V. 입법기대효과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VI. 유사입법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7조의 수수료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수수료

제4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VII. 법안작업의 경과

o 해당사항 없음

## [29] 권한의 위임·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I. 조문의 취지

-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관련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권한이 행사되도록 하고자 함
  - －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함
  - －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수임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의 명義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하여 권한 행사의 효율성·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
  - － 권한의 ‘위탁’이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의미함
  - －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수임한 공공기관 또는 협회는 그의 명義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III.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업무와 제17조제1항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접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위 사무를 위탁하도록 함.

#### ○ 시행령안

**제10조(업무의 위탁)**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2. 제17조제1항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접수

#### V. 입법기대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VI. 유사입법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권한의 위임·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 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o 해당사항 없음

### [30]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I. 조문의 취지

- 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제1항에서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 과태료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의 일종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 제2항에서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규제하고자 함
-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1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2항에서 일정한 매출 규모 이



상인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자, 공연 및 전시 티켓판매대행사, 공연 및 전시 기획·제작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작품 유통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통합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법안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제3항에서 예술사업자가 예술작품 또는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부당하게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포함시킨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계약서 또는 약관 상의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안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 제5항에서 예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예술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7항에서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의무규정을 위반한 자 및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자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시행령안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다. 제26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라.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V. 입법기대효과

-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의 권익보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VI. 유사입법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의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과태료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해당사항 없음

### [31] 시행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I. 조문의 취지

- 이 법의 시행일을 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 － 법률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함
  - －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그러나 법령의 시행시기를 법령에 정해두면 나중에 그 법령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진흥적 성격이 있는 법률의 경우 일정한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 III.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이 법률의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VI. 유사입법례

- 「산업디자인진흥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부칙의 시행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해당사항 없음

## [32]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 부 칙

**제2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 I. 조문의 취지

- 이 법 시행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간주하여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II. 조문의 내용설명

- 이 법 시행당시부터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보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이 법에서 정한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 법 시행일에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보도록 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행위로 없이도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법 시행일에 출범할수 있도록 함
- －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력·재산·권리관계 등은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포괄승계됨
-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승계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감독기관인 문화예술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이와 함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치고, 이 법에 따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관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III. 관련 조항

- 법안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제1항에서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함

#### IV. 하위법령 위임사항

- 해당사항 없음

#### V. 입법기대효과

-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의 설립기간을 최소화하고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 VI. 유사입법례

- 「산업디자인진흥법」 부칙 제2조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VII. 법안작업의 경과

- 해당사항 없음



## V.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예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예술산업을 진흥하여 예술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산업”이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제외한다.
2. “예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분야에서 예술가의 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예술소비 생활에 제공하거나 예술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개발된 유·무형의 창작물 또는 예술용역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예술부가상품”이란 예술작품의 복제품(콘텐츠 형태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화상품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공연·전시 과정에서 파생된 콘텐츠 등을 말한다.
4. “예술용역”이란 예술가의 창작, 실연, 실연의 지휘·연출·감독, 공연·촬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예술가”란 예술용역을 제공한 사람 또는 예술용역을 제공한 의사를 가지고 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6. “예술사업자”란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기획·제작·유통업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외한다.
7. “예술소비자”라 함은 예술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예술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향유, 체험, 참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작, 유통, 소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예술분야의 혁신을 통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술산업의 진흥이 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통하여 예술산업 발전의 혜택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예술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술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제6조(예술산업의 창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예술사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현장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및 직무능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술기획전문회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이하 “예술기획전문회사”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산업관련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2. 예술기획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3.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4.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5. 예술기획전문회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
7.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8. 예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제9조(예술산업의 투자활성화)** ① 국가는 예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모태조합에 예술산업 계정을 운용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술부가상품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부가상품 관련 창업 및 홍보 지원
2. 예술부가상품 시장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3. 예술부가상품 전문 유통망 조성
4. 예술부가상품 개발 관련 저작권 상담 및 지원
5. 예술부가상품의 해외 유통 지원

**제11조(예술용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용품(예술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나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품질향상과 재료 및 처리기법 등 예술용품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용품의 상품성과 유통 능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술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예술용품을 구매할 경우 전항의 표준규격에 맞는 예술용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예술소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술용품의 제작·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기반 정책)** 국가는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예술산업 진흥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예술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매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자
2. 공연 및 전시 티켓판매대행사
3. 공연 및 전시 기획·제작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작품 유통관련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자료의 세부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되,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통합전산망의 운영, 자료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예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예술광고 및 협찬 중개의 수수료율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있어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실태조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7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①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제작·유통을 위한 기획, 광고·협찬 중개, 예술가의 예술용역 제공의 기획·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예술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 있는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변경신고, 신고증의 발급, 폐업 및 직권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진흥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예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예술산업 창업 및 투자지원
3. 예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4. 예술기획전문회사 육성·지원
5. 예술산업 유통·전시·홍보 지원
6. 예술부가상품시장 활성화 지원
7. 예술용품 품질개발 및 기술개발
8. 예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9. 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증진
10.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11. 그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⑤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장 공정한 거래질서 및 예술소비자 권익보호

**제20조(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① 국가는 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예술가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사업자와 예술가 간의 계약에 있어서, 예술가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의 예술인으로 본다.

**제22조(예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① 예술사업자는 다른 예술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예술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예술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예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예술소비자 보호시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유통·거래에서 예술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술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6조에 따른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조사

3. 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예술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예술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밖에 예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청약철회)** ①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입장 전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예술소비자가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을 하였더라도 공연 및 전시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예술소비자가 미술작품을 구매한 경우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예술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1. 예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예술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예술작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술소비자의 관람, 일부 소비로 미술작품 유통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복제가 가능한 예술부가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예술사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포장에 표시하여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술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⑤ 청약철회의 대상, 기간, 환불기준, 환불수수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예술소비자 권익침해 계약의 금지)** ① 예술사업자는 예술작품 또는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부당하게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예술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을 거절하는 내용을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서 또는 약관의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예술소비자보호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예술사업자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예술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예술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예술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예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예술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으로 하여금 예술소비자와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과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는 진흥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예술소비자단체·예술사업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진흥원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술사업자 간의 분쟁에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 지원)** ①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작품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2. 예술작품을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한국예술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사업
3. 국내외 예술산업 관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연 매출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자는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진흥원은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진흥원은 예술산업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

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예술산업통합전산망자료)**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 및 전시장 명칭
2. 공연 및 전시 제목
3. 공연 및 전시 기간
4. 공연의 등급
5. 공연 및 전시 제작자의 국적
6. 공연 및 전시 관람요금
7. 입장권 판매액(공연 및 전시별, 날짜별 구분)
8. 입장객 수
9. 그 밖에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2. 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
3. 예술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 예술산업의 해외시장 동향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예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예술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영업활동 증빙서류)**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이란 “법 제17조제1항이 정하는 영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 ①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 주요 내용과 다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연급 배우가 사전 고지 없이 교체된 경우
2. 공연 및 전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된 경우

-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 ③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액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9조(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예술사업자가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 거래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의 결함 등에 따른 예술소비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예술작품 및 예술부가상품을 거래할 때 예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2. 제17조제1항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접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산업통합전산망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800만원 1,000만원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다. 제26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라.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예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30조 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술기획전문회사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서에 독립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기획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기획전문회사의 명칭
2. 예술기획전문회사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예술기획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예술기획전문회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예술기획전문회사를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기획전문회사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예술기획전문회사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술기획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제28조 관련)

구 분	금 액
1.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	25,000원
2. 예술기획전문회사 변경신고	15,000원

**예술기획전문회사**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예술기획 전문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직형태	[    ] 개인 [    ] 법인 [    ] 기타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산고의 경우	독립한 사무소를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의 경우	예술기획전문화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술기획전문회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예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예술기획전문회사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예술기획 전문회사	명칭		
	주소		
	(폐업 전)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 일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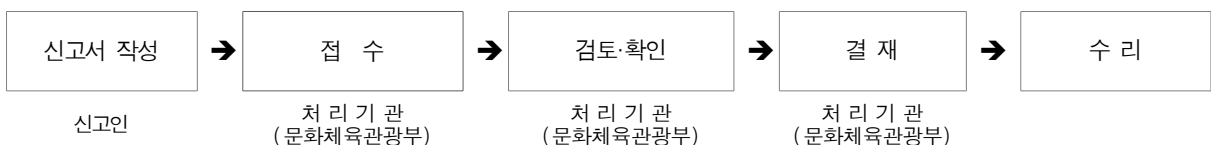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VI. 부록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 제 1차 자문회의

- 목적 : 예술기획사 및 예술부가상품 유통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일시 : 2016. 10. 7(금), 10:00~
- 장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회의실 등
- 참석 자문위원 : 김지원(EA&C 대표, EMK뮤지컬컴퍼니 부대표), 최선희(초이 앤라거 갤러리 대표), 김세규(LG 유플러스 콘텐츠소싱팀 차장)

### ○ 저작권 및 로열티 관련 이슈

- NT Live, Exhibition on Screen 등 예술콘텐츠를 영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국내 콘텐츠를 유통하고 싶어도 불법복제 등의 우려로 인하여 실시간 서비스(VOD)로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경우도 있음. 유통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예술부가상품 유통을 시도할 때에 진입장벽이 되기도 함. 예술부가상품 제작 진흥 역시 법안의 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가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 보호장치가 있다면 유통할 부가상품 역시 늘어날 것임(김세규)
- 무대예술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에 로열티, 라이선스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조건들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함. 공연 당시에는 2차제작물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출연계약서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후 2차 제작과 관련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시도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음. 방송계나 해외시장의 사례들을 참고하되 국내시장 실정에 맞는 **저작권료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부가상품 제작, 2차 저작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는 표준계약서 등이 보급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김지원)
- 영화/방송영상의 경우 저작권을 제작사에 몰아주는 특례조항 등이 있고, 음악의 경우는 저작권위탁 등도 가능함. 무대예술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저작협상사례나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됨. 음악계의 사례처럼 저작위탁을 통한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저작신탁단체**가 존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황승흠)
- 저작신탁단체가 발족한다면 해외와의 저작권관련 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기능도 포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전시기획에 해외에서 이미 제작된 작품을 포함시킬 경우, 원 제작사/저작자와의 접촉이나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음(최선희)

### ○ 예술부가상품 창업지원 관련 의견

-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패션, IT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임. 그러나 좋은 협업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창업의 어려움으로 좌절되거나,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적당한 수준에 정체시키고 마는 경우도 많음. 창업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인프라지원** 등이 제공된다면 다양한 장르에서, 여

- 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최선희)
- 시각예술 갤러리의 경우 창업 후 2-3년 내에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갤러리의 경우 유통사업자이나 예술상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일반 기업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으나, 법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달리 없음. 해외아트페어의 경우 5년 이하의 신생 갤러리는 부스비를 좀 더 할인받기도 함. 갤러리가 제대로 안정되기까지는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더불어 한국의 컬렉터들도 한국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장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신생작가/갤러리들을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최선희)

#### ○ 유통활성화 관련 의견

- 영화 등의 경우에는 작품을 묶어서 유통하는 등 **전문유통사**가 활발히 활동 중이나 예술분야에서는 부가상품 유통 전문사를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 LG유플러스에서는 Seven Arts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Arts Alliance 등 해외 전문유통사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음) 전시 등을 영상화하여 자체 사이트에서 온라인 공개하는 영상제작 전문회사 등은 조금씩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작한 영상은 단순히 아카이빙이나 레퍼런스용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나 갤러리에 수익이 돌아오지는 않음(김세규, 최선희)
- 일본의 경우 **라이브뷰잉**(공연 실황을 동시간대에 영화관 등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상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국내에서도 곧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장애가 될 것이 영상물 등급허가제임. 국내에서 영상물 상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등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라이브뷰잉의 경우 사전에 영상등급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공연장을 벗어난 부가상품의 유통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듯. 국내에서는 메가박스과 롯데씨네마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임(김지원, 김세규, 황승흠)

#### ○ 해외진출지원 및 국제협력 관련 의견

- 시각예술 장르의 경우 아트페어를 통해서 해외진출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운송비 부분임. 작품 파손을 대비한 보험료 등은 갤러리 주체의 연간계약 등을 통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국제운송비는 조정할 방법이 없음(최선희)
- 서울아트마켓의 팸스초이스 선정작에게 공연자막 번역지원이 제공되는 것처럼 작품소개자료 등에 대한 **번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임.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기반으로 작가와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함(황승흠, 최선희)
- 최근 국내의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창작자들과도 빈번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창작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움. 해외 작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공연하는 라이선스 작품의 경우, 창작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라이선스 작업이라 해도 대본과 곡 정도만 사용할 뿐 안무, 무대, 의상 등 공연의 90% 이상을 재창작(small licence)하기도 함. 또 작품 제작 후 해외유통을 위해서는 해외의 명망있는 창작자들과의 작업이 필수적임(뮤지컬 <마타하리>의 경우, 작품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외 창작진을 영입). 한국영화 인정기준처럼 **창작작품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김지원, 황승흠)

- 면세관련 이슈가 매우 중요함.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서는 공연예술제작사에 대한 면세를 제공해주겠다는 혜택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유치제안을 보내오고 있음. 한국의 공연예술시장은 매우 활발하게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음.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등의 제작사들도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음. 국내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없다면 면세를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세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창작인정기준 등을 조율하면 창작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세혜택 수혜여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봄(김지원, 황승흠)

#### ○ 예술기획업 신고제도 관련 의견

- 시각분야의 경우 예술기획업 신고요건인 2년이라는 기준은 적당하다고 느껴짐. 다만 개인단위의 독립기획자인지 사업체인지에 따라 약간의 구분은 필요하다고 봄. 독립기획자의 경우 2년 정도면 전공자 졸업 후 적당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나, 갤러리의 경우는 초기 2-3년을 버텨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1년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 인턴쉽 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도 필요하나,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연계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봄. 전공졸업자들이 바로 현장으로 넘어오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를 중심으로 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임(최선희)
- 산업 진흥법안의 대상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함.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업종으로 기준하게 되는지? 공연기획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들의 경우 1,2인이 생계유지도 어려운 정도로 꾸려나가는 작은 회사에서부터 연간매출 1,2천억 규모의 대형기획사도 있을 정도로 업계 내에서도 간극이 매우 큼. 그러나 매출규모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기획사들이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님. 연간매출규모가 크다고 해도 경영이 안정된 상태는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회사들 중 하나만 무너져도 업계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불안감이 업계 내에 팽배함(김지원)
- 지금 법안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신고제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매력을 느끼지는 못함. 특히 예술통합전산망 참여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총매출액 노출로 인해 제작환경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음(김지원)
-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음. 해외진출지원과 관련한 비용지원,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술부가상품 창업지원 등. 또한 무대예술의 경우 제작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공연장보다도 연습실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임. 작품제작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주차공간, 소음에 자유로운 공간)을 갖춘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요구되는데 공연장의 숫자에 비해 연습실이나 제작스튜디오 공간은 턱없이 적음.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고 신고제에 참여한 회사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저작권 계약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혜택이 있어야 신고제 참여가 활발해질 듯(김지원)

- **홍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면 좋을 듯. 아무리 좋은 작품을 제작한다 해도 노출시킬 수 있는 매체 자체가 부족함. 또 전문 홍보대행사를 기용하지 않는 이상 전방위적 홍보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만한 비용이 없어 그저 구색갖추기 식의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김세규, 최선희)

#### ○ 기타

- 의상, 무대, 조명디자인 등의 업계 현황은 시장규모에 비해 일부 창작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임. 해외의 경우 선택의 폭도 넓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임(김지원)

## 제 2차 자문회의

- 목적 : 조문안 전반 검토
- 일시 : 2016. 10. 13(목), 16:00~ 외 개별 서면자문 등
- 장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회의실 등
- 참석자 :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봉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강은경(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의전담교수)

### ○ 법률(안) 전반 검토의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연구위원)

#### － 목적성/방향성 명확하게 설정

- 법안의 대상, 이 법안을 통해 구축/강화하고자 하는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책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법의 목적성, 방향성 설정이 불명확함. 법의 목적에 기반하여 사용되는 언어의 정의가 명료하게 완결되어야 법제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
- 법제 안에서 사용된 단어들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과 미술 시장을 중심에 둔 법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함. 예술은 굉장히 넓은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산업별 크기, 기존 개별 법안 등을 고려할 때, 공연, 미술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도 포함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범주화가 필요함. 법 내에서 정의를 위해 조문을 할애하는 것보다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가져오되 필요한 부분만 추가 정의를 해도 좋을 듯
- 기존에 제정된 법안 또는 제정 준비중인 법안들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함. 공연법이 현재 공연장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어서 개정하는 방안도 한 방법임. 이미 미술품 유통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 계획이 발표된터라 우리법에 관련 내용이 포괄되던지 정리가 필요

#### － 용어의 정리/정의 명료화 필요

- 예술산업과 이를 업으로 하는 영역에 대한 정리 필요. 예술가, 예술작품, 부가상품 등에 대한 정의는 불필요하지 않나 여겨짐. 법조문 안에서의 기능적 정의일 것이나 임의의 제한이 될 수 있음
- 예술사업자를 기획, 제작, 유통업으로 분류하였으나 공연은 공연장처럼 기획, 제작, 유통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시각은 제작업이 없고 기획, 유통이 결합된 구조가 많아 별도의 정의나 구분이 모호함
- 특히 조문 내에서 예술가와 예술인을 공용하여 사용하는데 ‘예술인복지법’ 제정시 한 차례 논의된 이슈로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예술인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함

#### － 1장(총칙) 검토의견

- 동어반복성 어휘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2조 1항의 대중문화예술제외 조항이 이중 부정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2조 7호의 향유, 체험, 사용, 이용 등의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화시킬 필요 있음(연구진: 콘텐츠쪽에서는 사용은 유형물에, 무형물인 콘텐츠는 이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함)
- 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같은 경우도 1조의 목적과 유사한 조항임. 조항간의 연계성을 더 높여서 정리할 필요 있을 듯

#### - 2장(예술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 검토의견

- 2장 5조 종합계획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 정책의 실행이 불안정하다 판단될 경우 계획을 법안에 넣어 공식화하기도 하는데, 다른 법안에 삽입된 대부분의 계획들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장 전체를 삭제하고 추후 법안 발효 시 기본계획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함
- 6조 실태조사의 경우 3장으로 넘겨도 좋을 듯

#### - 3장(예술산업의 기반조성) 검토의견

- 본 법의 본격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상당부분이 3조에 삽입됨. 내용이 약간 혼합되어 있는데 직접지원 관련 및 그 이외의 기반조성과 관련한 조문을 한 장으로, 공정거래 등 거래환경 관련 내용을 한 장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여지 있음. 이와 관련해 조항들의 순서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좋겠음
- 제8조 예술산업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필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후에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듯
- 제9조 제목인 '전문인력 양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가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이 보다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발전시키는 개념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을 찾는 것이 좋겠음.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조문이 많은 법안에 들어가는데 대개 교육사업, 기관을 통한 지원임. 기존에 예경에서 인력양성 관련 하고 있는 사업(아카데미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법조항에서 구조화해도 좋을 듯
- 제10조 기존 콘텐츠진흥 관련 조항에 공연산업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장르나 시장 구조의 문제일 듯. 기존 법안을 검토하여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은 가져와도 좋겠음
-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앞 조의 인력양성과 같이 예경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법적 근거를 더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련, 지정사업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하나의 전담기관이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함. 우수예술용품 지정 등을 관장하는 전담기관은 가능하나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은 법에서 다루는 범위 및 그 이외의 범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이며, 진흥기

관 신설까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예술산업진흥원’으로 명기하여 기존 기관과의 관계나 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17조 제목이 ‘예술산업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공연, 시각분야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라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미술시장의 경우 전시 시장뿐만 아니라 미술상품 시장의 규모가 더 큼. 지금처럼 공연 및 전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산망의 이름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 법안의 이름에 비해 다루는 범위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불분명성이 법안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항에서 전산망의 대상자들(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자, 티켓 판매대행사, 기획제작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법안 2조에서 정의한 단어들이나 다른 법에서 다루는 대상자들에 대한 정의와 수준을 맞추어 필요 있음. 표준산업분류상의 업 정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이는 제21조의 ‘예술기획전문회사’라는 용어와도 맞물려 불분명함.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법적 용어를 쓰거나 법 내에서 명료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함
- 제18조의 공동구매 및 판매를 위하는 부분은 세부조항이고 요체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가까우므로 제목을 ‘예술산업 관련 분야 협동조합 지원’ 등으로 수정 검토
- 제20조 부가상품의 경우 예술산업을 논의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으로 예술용품보다 중요도가 더 높은 조문이라 개발 필요
- 제21조 예술기획전문회사 신고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제에 준하여 도입하려는 제도인 듯한데, 해당제도는 소속연예인의 노예계약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발효한 제도로 상대적으로 현 공연업과 미술업에서는 크게 다뤄지는 안건은 아님. 전반적인 조문의 내용이 문화산업전문회사(SPC) 느낌임(연구진: 문전사는 법인을 요구하나 이 법은 산업디자인법에 가까워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 개념임). 이 법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속성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공연·미술계에 시장을 형성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라면 신고제와 등록제 중 어느 쪽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신고제 보다는 등록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한다면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함. 등록/신고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지자체에 행정업무가 발생하므로 규정만 제시하여 지원하는 것도 방안임.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실제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제2조에서 정의한 예술제작, 유통업은 해당되지 않는지, 화랑업은 등록대상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 4장(공정한 거래질서) 검토의견

- 24~25조는 예술인 복지법과의 차별성을 두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분쟁조정 등의 주체를 일정 전담기관으로 둘 것인지, 상징적 조문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려 필요. 현재 예술인신문고는 복지와 산업에 대한 내용 동시 포함하고 있음

- 미술이 들어올 경우, 이력제, 공인감정기관-감정표준화 등이 논의중에 있는데, 미술시장을 반영한 법안 검토가 필요
- 소비자보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굳이 법안에 별도 지침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법안의 내용을 가져오거나, 해당 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존 법안에 추가 지침을 삽입하는 방안도 가능함. 전문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이 있는 만큼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 역할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하여 조항 삽입 필요

#### ○ 기타 전반 검토의견

- 미술은 미술법 유통 및 진흥법 관련 제정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공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거나 미술법 연구진들과 논의하여 법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 산업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들이 다양함. 표준산업분류법상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을 산업으로 규정하나, 제조와 연관할 경우에는 일정 투자에 따르는 일정 수익을 거두어야 산업으로 규정함. 더불어 시장에서 가지는 산업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편함도 고려해야 함. 그래서 단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 공연과 미술을 한 법안으로 묶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함. 이 법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공연만으로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훨씬 쉽고 간결한 법안을 쓸 수 있으나, 본 산업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지점임
- 미술시장을 더 넓게 봐야함. 개인 작가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유통 시장은 훨씬 거대하여 산업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많을 것. 미술과 공연을 한 범주로 넣으려면 다른 법의 사례를 빌어 범주를 재범주화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텐데, 비교적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는 미술시장에 비해 공연시장에서는 제작, 기획, 유통 등의 여러 단계를 단일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
-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도 창작예술인과 실연예술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예술이라는 영역은 광대하여 특별한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음. 예술산업법이라고 했을 때 대중연예사업이나 영화까지를 포함하는 큰 체계가 되어야 하는지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들로 나뉘는 것이 맞을지. 분야에 따라 진전정도가 달라 하나의 법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부가상품 관련한 조문은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 만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법률(안) 전반 검토의견(산업연구원 최봉현 연구위원)

##### - 제1조(목적) 관련

- (목적) ..... 예술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통하여 예술부문의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한 예술산업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기반조성 및 거래질서 확립은 세부 수단으로 후반부 조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단들도 함께 검토한 뒤 경중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임

#### - 제2조(정의) 관련

- 1항 ‘예술산업’ 정의 중 ‘연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음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설명이 필요함
- 예술산업에 관한 정의에서 출발점은 [예술]이 되어야 하는데, 모호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의하고, 예술의 범위에 관해서도 포함시키는게 좋겠음(음악, 미술, 문학, 조각, 공예 등 무엇이 예술인지, 예술에 포함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예술용역의 개념도 모호한 부분이 있음. 용역은 service를 한자어로 옮긴 것인데, 지원서비스와 예술서비스인지, 공연기획자가 시나리오작가에게 시나리오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기획자 입장에서는 예술용역이 될 수 있음
- 전체적인 산업의 가치사슬과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를 그려두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6항 예술사업자 정의 중, 나에서 언급한 ‘단,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작품의 제작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제외조항이 있는데, 창작활동과 작품제작이 동일하면 예술제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혼선이 있을 것임. 개인창작자도 사업자 등록해서 제작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

####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관련

-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 호의 사항도 재정리하여 축조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겠음
- 인프라 — 기반조성, 핵심생산요소 — 인력, 경쟁력 강화 — 창업, 유통, 해외진출지원 등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임

#### - 제3장 예술산업의 기반조성 관련

- 산업기반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해당 산업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볼 수 있음. 예술의 분야와 플레이어가 다양하여 기반이 하나로 통일되기는 어려우므로 기반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구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기타

- 보칙에 있는 수수료 납부규정은 규제적이라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23조의 신고의무화 등도 마찬가지로
- 19조1호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의 소지가 있음. 동2호의 조사에 응해한다는 강제조항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조항임
- 25조의 불공정행위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각종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

- 27조 분쟁조정은 이미 저작권 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중복의 소지가 있음

○ **법률(안) 전반 검토의견**(서울문화재단 이규석 창작지원본부장)

- 예술산업 정의 관련,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는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정의를 열거형으로 명시하고 있음. 동 법안에서 정의하는 예술산업이 문화예술 중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을 구분하고자 함인지, 전체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임
- 동 법안에서는 포괄정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정책/지원 대상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법률과의 범주, 정의 등의 정리가 명확한 것이 좋겠음 (예를 들어 문화산업 정의로 언급되어 있는 공연과 전시 등을 그 법에서 없애고 이 법으로 가져오는 등의 교통정리.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과 동 법안의 예술가 등 동일 용어에 대한 혼선 등)
- 예술산업을 범주화하여 정의할 경우, 관련 업종 등을 검토하여 정책 대상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장 크기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예술산업을 하나의 영역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동 법안의 제목과 내용을 우회적으로 ‘예술의 산업적 발전 및 유통 촉진을 위한 법률’ 등으로 설정한다면, 별도의 예술산업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도 산업적 발전 및 유통 관련 내용으로 압축하여 입법할 수도 있을 것임
- 동 법안에서 주요하게 본 정책 대상은 예술 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로 기획, 제작업을 예술사업자로 분리하여 정의하였음. 하지만 예술가 본인이 기획·제작업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기획, 제작을 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사례도 빈번한데 이 부분은 제외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예술기획전문회사의 경우, 신고제를 택하였으나 등록제도 검토 필요. 신고제는 완전한 자율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고제로 하며 지원·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보일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종사경력 인정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대중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시장에서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이쪽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난립하고, 두 법에 따라 겸업신고 사례가 늘면서 동일업체인데 거래편의에 따라 양쪽 법을 넘나들며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상행위를 하면서 세무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요건은 문산법 등에서 명시한 요건 등을 참고해도 좋을 듯
- 문산법, 대중법 등 타 법률 대비, 동 법안의 주요 정책 대상의 권익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조문 등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의 보완도 이루어지면 좋겠음

○ **법률(안) 전반 검토의견**(한국예술종합학교 강은경 강의전담 교수)

- 원론적인 입장에서, 예술의 특성상 자율적인 예술 생태계를 조성, 지원하는 한

편 규제나 통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 법안상 신설 규제, 국가의 시장 관여 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를 통한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문화예술 관련 입법들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대해 실제 주요 수법자인 문화예술계 구성원 간에 충분한 공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는 바,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공정한 거래질서에서 예술인 복지법 등 기존 법제와의 체계정합성상의 숙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 제 3차 자문회의

- 목적 : 예술소비 및 예술용품 제작 및 유통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일시 : 2016. 10. 20(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서계동)
- 참석자 : 김형걸(Goodwill Advisory 대표), 정기훈(클립서비스 문화전략사업부 부장), 조석현(호미화방 대표)

#### ○ 예술 소비 관련 검토의견 논의

- 공연물의 경우 관람가능연령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잦은 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 후에 청소년 관람가/불가에 대해서만 판정하고 사후고지 하도록 되어 있음. 공연물의 경우 선정성이나 소재보다 작품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대부분임. 집중이 필요한 공연의 경우 다른 관람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령대를 높게 매기는 편임. 그러나 예매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많음. 명확한 기준 없이 기획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소비자가 관람 후에 항의를 하는 사례도 있음. 기획자의 편의나 의지 문제가 아닌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등급분류를 할 필요가 있음(정기훈)
- 공연 취소/환불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는 편. 최근 가장 자주 대두되는 문제 중에 주차시설이 미비해 도착이 늦어져 관람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가 있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권고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음. 이외에도 공연의 일부를 관람한 후에 재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가장 주요한 논점은 공연물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과 동일한 환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임. 공연의 경우 전석 사전예약제로 관람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물게 되어 있음. 그러나 좋은 좌석을 선점하였다가 급작스럽게 취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작자/기획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겪는 경우가 왕왕 있음. 더불어 취소/환불에 대한 규정을 유통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에 준하여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함(정기훈)
- 미술시장에서는 위작 관련, 감정기관 및 구매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사례임. 전체시장규모의 약 70%에 달하는 일부 옥션/화랑들이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과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음. 더불어 구매 이후 위작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임. 현재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약관에는 작품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감정기록서는 평가원이 보관하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평가원과 감정위원은 감정결과가 담함 등 고의로 조작된 경우가 아니면 감정결과에 대하여 의뢰인, 소유자 및 취득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감정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해외의 사례처럼 감정위원을 공개

하고 해당 감정위원회는 이후 해당 작품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호 장치가 필요함. 뉴욕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입법례는 위작으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보증 거절도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규제를 통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지만 현재 작품의 진위와 가격에 대한 시장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소비 저변이 확대되어도 해외 시장으로 소비자를 뺏기게 되므로 꼭 필요한 규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김형걸)

#### ○ 예술용품 관련 검토의견 논의

- 미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향유인구가 늘어나야 예술용품 시장도 성장할 수 있는데 최근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취미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거의 실종된 상태임. 교과과정에서 예체능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교육용 미술도구/기기 등의 시장도 점점 위축되고 있음. 예술향유인구를 성장시키려면 교육단계에서부터 폭넓은 경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조석현)
- 교육용품 시장의 경우 정부에서 학교에 학습용품 등을 보급할 때에도 가격단가만을 따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물품들을 보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 단가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품질에 대한 평가 등도 함께 이루어져서,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조석현)
- 예술용품 제작자 쪽이 매우 영세하고, 현재 점점 없어지는 추세임. 신한이나 알파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 점차 흡수하고 있음.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기업에서 매우 사소한 물품들까지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다보니 대항할 능력이 되지 않아 폐업하는 곳들이 많음. 우수예술용품 지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대규모 입찰 등에서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조석현)
- 국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모가 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직접적 자금지원이 아니더라도,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지원, 마케팅지원, 해외 페어 참가지원 등이 도움이 될 것임(김형걸)
- 국내의 무대장치/조명 등과 관련한 기기들은 국내에서는 전혀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량 해외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려는 업체가 없음. 장비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지원-통합연구센터나 제작연구공간 등이 있다면 좋을 듯. 더불어 공간음향/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단순 공연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사무용, 주거용 건축물 등에도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큰데 국내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기훈)

#### ○ 부가상품 관련 검토의견 논의

- 공연 MD의 경우 해당 공연의 브랜드가치가 판매의 기반임. 해외 유명 작품이나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의 MD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음. 다만 창작뮤지컬이나 연극 등 기존의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의 경우 MD를 제작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MD는 브랜드가치에 기대는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가 활발하지 않음. 또한 창작작품들의 경우 소량제작으로 인해 상품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고, 제작하더라도 품질을 높이기 어려움. 제작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일부 옥외광고물의 경우 공연예술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할인이 제공되어 통상 상업광고 대비 약 60% 정도의 가격에 제작 가능함(정기훈)
- 지방의 경우, 공연장 내에서 MD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음. 극장 내 음료 등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장 내 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지침 없이 각 공연장의 의지에 따르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함(정기훈)

#### ○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미술의 경우 약 5개 내외의 화랑/옥션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70%에 달함. 시장균형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비대칭적 규제 및 지원정책이 필요함. 즉, 공공지원을 공모형식으로 수월성에 따라 선별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공공지원도 독점할 우려가 있음(실제 단색화 열풍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공공지원 몰림). 따라서 독과점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지원은 능력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기금(Grant Funding), 공공+민간 펀드(Arts Impact Fund),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산업펀드(Art Industry Fund) 등으로 지원 방식이 다변화될 필요 있음. 또한 미술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기능의 회복임. 가격이 표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임. 독과점사업자의 내부자행위 거래행위 금지,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금지 등,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거래 유도보다는 구조적 투명화가 필요한 시점임(김형걸)
- (조문추가 의견) 제4장 공정한 거래질서 제26조 뒤에 **예술사업자의 예술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 삽입(김형걸)

①독과점 예술사업자 혹은 시장지배적 예술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행위를 하여 불공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예술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3. 제1호에서부터 제2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예술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조문추가 의견) 제4장 공정한 거래질서 제31조 뒤에 **예술소비자의 권리보호** 조항 삽입(김형걸)

①예술사업자는 예술작품을 거래할 때 부당하게 예술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판매계약서 혹은 약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위반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 혹은 약관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예술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보증 및 책임을 거절하는 내용을 계약서 혹은 약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을 경우에 이것은 효력이 없다.

- 공연유통분야 역시 일부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압박을 통해 독점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독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높일 경우 소비자들은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음. 인터파크가 티켓유통시장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제작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하여 판매를 증진하고자 하나, 시장지배 사업자가 독점계약을 강제하거나, 수익금 선지급 등을 통해 독점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독과점으로 인해서 시장왜곡 등이 등장할 수 있음. 예매처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달라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좌석공유제임. 기술적 구현은 가능하나 투자와 합의가 필요함(정기훈)